

vol. **70**

제282회 임시회/제283회 정례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충청남도 의회소식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70

제282회 임시회·제283회 정례회

CONTENTS



02
신년사



10
생생인터뷰



28
상임위원회



52
연구 및 토론

03
본회의

12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36
의원주장

58
포토의정

04
하이슈

20
5분 발언

38
제282회·제283회
주요안건처리현황

68
의회사무처 소식

06
의원논단

27
현장의정

70
느낌충남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 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 다재다능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대내외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았으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의 활시위를 잡아 당겨야 한다는 사례를 실감나게 보여준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메르스,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40명의 의원들은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피해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며, 유연한 대처로 어떠한 재난에도 '끄떡없는 충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道の회의 3농 혁신 등 정책특위는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찾고자 선봉장을 자청하며 최일선에서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道の회의는 한결같은 자세로 공감·창조·실천 의정이라는 3대 비전 아래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될 각오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경제·관광 등 新아시아 실크로드를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입니다.

앞으로 道の회의는 도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210만 도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1. 1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

도민 삶과 밀접한 민생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 활발한 의원 입법발의를 통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 42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충남도의회는 제282회 임시회와 제283회 정례회 등 5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8일간 개최한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33개의 안건과 결의안 등을 처리 하고 폐회했다. 28건의 조례 제·개정 중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가 무려 20건에 달한다.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익활동 촉진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조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통장 연합회 지원 조례안”, 유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장기승 의원과 김종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개최한 제283회

정례회에서는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424건의 조치요구를 하였다. 또한 본회의에서 58건의 안건을 의결 하였다. 그 중 34건의 조례 제·개정에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6년도 도 및 도 교육청 예산 안에 대한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도 5조6,280억원, 도 교육청 2조8,525억원을 의결하였다.

핫이슈

HOT
ISSUE 1

가뭄 피해 입은 충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충남도의회가 가뭄 피해를 보고 있는 충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강용일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10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가뭄에 대한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용일 의원은 “도는 지난 봄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도내 서해안 지역에서는 긴급 급수를 시행하는 등 가뭄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른장마와 극심한 불볕더위가 가을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령댐의 저수율은 22.4%이고,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역시 30%를 밑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며 “이는 일시



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의 위기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용일 의원은 이를 위해 “충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농·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과 저수지 준설 및 관개시설 개선, 해수의 담수화 등 중장기적인 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강백제보와 보령댐 간 도수관로 매설 공사를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며 “노후 급수관을 교체해 수자원의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
ISSUE 2

정부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10월 8일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채택했다. 맹정호 의원에게 따르면 정부가 지난 5월과 7월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 1만과 3만 등 4만 수입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풍년으로 인한 쌀 값 하락에 더불어 밥쌀용 쌀도 수입한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해져 쌀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대북 쌀 차관



의 재개”라며 “과거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값 안정에 이바지했던 효과도 이미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8·25남북합의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됐다”며 “130만이 넘는 쌀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

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T
ISSUE 3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 높여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은 11월 23일 대전 배재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기영 의장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사람이 집중되다 보니 국토 불균형 및 경제적 비효율성, 수도권과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단순히 불균형 해소 등의 공간적 문제를 넘어 도시 간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건강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앞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
ISSUE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도의회는 11월 2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지역 복지사업 1496개가 정부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다며 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김연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효율화 및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 취지는 이해되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사업은 정부 사업에서는 다루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정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책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OT
ISSUE 5

정부와 국회에 항구적 가뭄 해소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2월 1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항구적 가뭄 저감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김기영 의장과 조길행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6개 시·도 운영위원장, 허승욱 도정무부지사, 김지철 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조길행 위원장은 대표발의를 통해 "올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더는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신속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뭄 재앙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전국 가뭄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인 물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길행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는 ▲수요관리 체계 재정비와 물 관리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급수체계 조정 및 물그릇과 신규수자원 추가 확보 ▲유수율 개선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 국비 지원 ▲전국민 물 절약 홍보운동 전개 ▲예당저수지~공주보 도수로 공사비 조속한 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



유익환
제1부의장

가뭄 극복과 선조의 지혜

우리가 겪는 기상재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닌 ‘가뭄’이라고 한다. 태풍이나 폭우가 일시에 닥쳤다가 지나가는 것이라면 가뭄은 알게 모르게 다가와 결국은 대기근을 유발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최초의 일류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더니, 그 위력은 인류사를 바꾸기도 한다. 오죽해야, 하다하다 못해 임금이 무릎을 꿇고 기우제를 올렸을까? 수리시설이 부족했던 옛일이지는 하지만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군주의 머리까지 조아리게 한 것이다.

최근 전국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충남 일부 지역은 식수도 모자랄 정도로 심각하다. 농업·공업용수 공급도 문제다. 이럴 때 농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논과 밭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심경은 어떻게 생각해 본다.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야 추수를 앞두고 있으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지 모르나, 가을 밭작물을 키워야 하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가슴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게다.

이럴 때 떠오르는 것이 물을 다루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다. 삼국시대부터 벽골제 같은 대형 저수지를 조성하여 물을 모아 두었던 선조들이다. 마을마다 작은 웅덩이를 파 가뭄에 대비했다. 모내기한 논에는 바릿대를 하여 물이 새나가는 것을 막았다. 지대가 높아 물길에 닿지 않는 위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웅두레와 무자위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당장은 조금 여유 있는 곳의 물을 부족한 지역에 나누어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관정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일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물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은 해가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물이 극심하게 부족하지는 않다. 어디선가는 낭비되고 있는 물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과 공급 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

물을 사용하는 주민의 생활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물 쓰듯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상당한 값으로 물을 사 먹고 있다. 최근 절수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닥칠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해서 물 아껴 쓰기를 실천해야 한다. 설거지 한 물로 청소하고, 그 물로 미나리를 키웠던 조상들 처럼, 물의 재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천수답을 짓던 시절, 농부들은 논외 물꼬를 생명 같이 여겼다. 처마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그 한 방울도 아껴 썼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부들이 가뭄으로 애타는 일이 없도록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한다. 피땀으로 지은 농작물을 그냥 말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정성과 노력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의 소중한 먹을거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판을 보며, 우리 농민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빛이 들도록 모두가 가뭄 해결에 나서야 한다. 더욱 풍요로운 나날을 위해 다 함께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

국민안전조직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사고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 같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 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사고가 발생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를 총괄하도록 2014년 11월 19일부로 국민 안전처를 출범하였다. 금년 3월에는 4대분야 8대 핵심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요약하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 하고, 향후 5년간 30조원의 재원을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과 점검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사고가 나면 육상은 30분내, 해상은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도착해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범한지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특수구조대는 창설도 하지 못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도 한다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없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9월 5일 추자도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

신고접수 후 출동하는데 2시간이 걸려 그토록 강조했던 골든 타임을 놓쳤다. 승선원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엉뚱한 장소에서 수색하기도 하고 승선자는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안전업무 추진상황을 미루어 보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신고 받

는데만 주력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형식적인 대응훈련에 익숙 해져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 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또 발생 할 우려가 있고 이때 역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 이다.

우리 충남도는 268개의 섬과 1242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이 천혜의 관광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이 성업을 이 루고 밤에는 불을 밝히고 소리와 낙지 등을 잡는 일명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길이 낮설고 바다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실족이나 익사사고, 안개로 인한 낚시꾼 고립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 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예방대책과 대응체제가 절실한 상 황이다. 이제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또한 각 시·도와 시·군·구도 금년 7월부터 재난안전 조직을 확대 가동 중이다.

이 막대한 조직을 연계한 안전시스템 가동체계가 하루빨리 구축 되어 국민들이 사고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유 병 국
의원

충남서북부의 가뭄이 심각하다

보령댐 급수권역의 용수공급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산시의 경우 공공수영장이 문을 닫았고, 체육시설 사위장도 중단되었다. 보령댐의 물을 사용하는 충남서북부 8개 시군은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단수를 시행하기도 하고 대부분 자발적 절수운동을 하고 있으나 20% 감량의 목표달성이 미흡하면 강제 급수제한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령댐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곳은 충남 서북권에 있는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등 8개 시·군이다.

전국 17개 다목적댐은 용수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관리되고 있다. 보령댐 저수율은 19.5%로 '심각' 단계, 대청댐은 36%로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 다행히 최근 내린 비로 강수량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가장 큰 문제는 충남이다. 생활 공업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년처럼 물을 사용하면 보령댐은 2월말 아예 바닥날 실정이다. 대청댐도 생공용수는 문제가 없지만 농업용수 및 환경생태용수 공급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 이란 전망이다. 이제 웅담댐, 대청댐, 보령댐의 물이 충남 서북 부권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수자원과 관로체계 미흡 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장단기 대책을 짚어보자.

첫째, 물 절약 습관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UN인구행동 연구소가 지적한 물 부족국가이다. 물 사용량은 독일, 덴마크의 2배 수준이고, 미국,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둘째, 적어도 생공용수는 전 국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충남은 지형적 여건으로 수자원이 부족한데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충남 북부는 아직 여유가 있는 한강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셋째, 충남 서북부권은 오래된 도시로서 상수도관 노후화로 누수율이 높아 공급량의 35% 정도가 새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관로 개선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넷째, 충남 서북부는 공업용수가 절대 부족하다. 현재 보령댐 에서 1일 약 7만 톤을 서산과 당진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공장에서는 아산호를 정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생활 용수로 전환하고 공업용수는 아산호를 정수처리하거나 해수담수 화와 같은 별도의 수원을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물을 량 으로 관리하지 말고 사용목적에 따른 질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수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보령댐 물이 공급되면서 과거 하천이나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이 대부분 폐쇄되어 요즘과 같은 위기에 대응능력이 낮아진 것이다. 또 정부부처 별,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수원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물 관리 통합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홍수에 대하여 는 어느 정도 중앙부처의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뭄에 대하여는 관리부처별로 정의와 기준도 다르고, 관리목적의 상이하기 때문에 신속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중앙 부처에는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당장 코앞에 가뭄이 떨어졌다. 우선 할 일은 물을 적게 쓰는 것이다. 또 노후상수도관에서 단수는 지하수 역유입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맹정호
의원

재정 가뭄에 시달리는 지방교육

심각한 재정 가뭄에 지방교육이 목이 탄다. 갈증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치달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누리과정 예산이 근근이 연명하는 지방교육의 목을 죄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지방채를 발행하라며 충남교육청에 떠넘긴 빛이 5,285억원에 이른다.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13년 353억원, 2014년 1,557억원, 2015년 3,372억원이다. 이자만 145억원에 이른다. 지방채에는 교육부에서 갚기로 하고 승인한 교부금 부담과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자체 부담 교육채가 있는데, 충남의 경우 자체 부담 지방채는 0원이고 5,285억원 전부 교부금 부담 지방채다. 정부가 떠넘긴 빛이다.

2013년 이전에는 지방채가 없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교부금 부담 지방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채 이자 지원비용으로 편성한 3,826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받을 예산은 줄고 쓸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이렇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 ▲교부금 배정 때 학교 수가 아니라 학생 수 비중 높이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신규교원 선발 축소 등이다. 이렇게 되면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부금이 500억원 줄고 누리과정 예산 1,100억원이 늘어 대략 1,6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전국 교육청의 사정이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교부금 배정이 줄어드는 도 단위 교육청(경기도 제외)은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방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1인시위에 나섰고 지역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운동본부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상 농어촌교육과 교육자치를 포기하라는 중앙정부의 압박에 지방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요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교육감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감의 생각과 다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무상교육·보육을 말한다. 이 정책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공약이다. 당연히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다.

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이다. 공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는데 나라의 공간이 텅 비어 간다. 물론 공간이 비어가는 이유는 각종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불공정한 조세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좋다. 정부가 공약을 정 못 지킬 것 같으면 국민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공약을 직접 이행하지 못하고 지방교육청에 맡기게 되어 죄송하다는, 양해해 달라는, 솔직한 사과라도 전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분가한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식이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곳저곳에서 카드를 긁고 그 카드대금을 자식에게 결재하라고 주먹을 휘둘러서야 되겠는가.

교육은 신뢰이고 책임이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지방교육청은 교육청답게 일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교육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생생
INTERVIEW
김복만
예결특위위원장

충남도가 사상 첫 예산 6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경제 내실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인데, 당장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다. '한 해 농사'를 제대로 잘 짓기 위해서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예산 배정부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와 검토,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와 교육청의 예산 약 8조원의 심의를 앞두고 김복만 예결특위위원장의 어깨도 덩달아 무거워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을 만나 2016년도 충남도와 도 교육청 예산안을 어떻게 다룰지 들어봤다.

Q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특위 운영 방향은?

내년은 민선 6기의 터닝포인트가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충남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성장 위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재화 시키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민들의 복지 등 생활 속에서 실감하는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이 더 큰 화두다. 도의 회가 심의하는 영역 역시 SOC뿐만 아니라 농업, 문화·관광, 경제, 여성, 사회복지 등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는 문화와 복지, 행정, 건설, 경제, 농업 등 전문 분야의 의원님들이 포진하고 계시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각종 오해와 정보 부재는 소통이 단절된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도의 재정 상태가 무척이나 어렵다. 이는 집행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Q 충남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낭비를 줄이고, 살림살이를 살찌우게 하는 데 특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2016년도 도청예산은 6조13억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2조8,295억원으로 산적해 있는 충남의 사업에 비하면 그리 넉넉지 않은 예산임이 틀림없다. 예산의 몸통이는 6조원이라는 큰 규모로 성장했지만, 세부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녹록한 형편이 못 된다. 자치단체 행정 업무를 100개로 본다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사무가 무려 80개에 달할 정도다. 예를

들면 충남도의 6조 예산 중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예산의 일부도 그간 지원해 온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사용 목적이 구체화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게 할 계획이다.

Q 내년도 주요 관심 예산 사항을 설명해 달라

향후 글로벌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 예산이 눈에 띈다. 충남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총 65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돈'을 쓰는지 살필 계획이다. 장기적 가뭄 대응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에 대해서도 짚을 예정이다. 도는 용도별 용수를 확보하고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농공단지 수원 개발이나 지방상수원 수원조사 등에 약 300억원가량을 편성했다. 실질적으로 도민의 가뭄 극복에 예산이 짜였는지 보겠다. 이밖에 신종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방재와 관련한 사항과 학교 현장 중심의 단위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

Q 정부와 지방 모두 경제 활성화가 키워드이다.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 공유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추진력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단순히 '무엇

을 유지하겠다.', '무엇을 짓겠다.' 등 헛구호만 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틀에 맞춘 예산 확보와 계획이 필요하다. 돈은 부족한데 쓸 곳은 많다. 꼭 필요한 곳에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필 것이다. 관행을 점증적으로 탈피하고, 한 톨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체크할 것이다.

Q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화두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도내 어린이집 아이들은 총 3만830명으로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위기다.

아이들을 불모로 한 어른들의 싸움을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청은 지방 재정으로는 절대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정해진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사이 정작 피해는 누가 볼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늘의 별 따기'였던 국공립 유치원 입학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다. 충남 역시 15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앞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시·군의 재정이 악화돼 2~3달 뒤 지원을 중단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결국 누리과정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간의 힘겨루기에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 사용 목적은 우리 어린이들이어야 한다.

Q 끝으로 도민께 한마디 및 앞으로 각오는?

그동안 예결특위는 예산과 결산 심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다. 제10대 의회 들어 1년씩 상시 운용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예결특위를 운영할 경우 '수박 겉핥기식'의 심의밖에 될 수 없다. 예산 의결부터 집행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려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을 만

들 수 있다. 사후적 처방보다는 예방을 위한 예산 심의를 하겠다. 또 중앙부처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국비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 감시자로서, 때로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제283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윤 석 우 의원

Q1 2014년 8월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이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와 안영리 일원에 면적 6만 1,805㎡, 제조시설 1만 3,500㎡, 부대시설 2만 5,568㎡ 규모로 약 772억원을 투자해서 들어설 계획임. 지난 2013년 7월과 2014년 8월 24일 불산 유출이 발생했음. 8월 불산 유출사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은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도 있음. 2014년 5월 9일 공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14일 현장방문 보고서가 작성됐음. 현장방문 보고서에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공주시로 이전할 경우 770억원을 투자하고 17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공장 운영 상태로 보아서 환경오염과 민원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남도와 보조금 관련 실무회의를 거쳐 유치를 결정했다고 함. 그러나 당시 금산 공장은 수차례 환경오염 주민대책위가 만들어 졌고 공장 입구에 질산 유출로 이전을 요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했음. 공주 탄천에 들어설 공장은 불화수소 사용업체로 불산이 유출되면 사람의 피부를 통과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목숨까지 잃는 일이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어 지역 주민들은 큰 걱정 속에 있는

데도 누구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지 않고 있음. 탄천에 들어설 공장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있는 산업단지 입구에 자리하고 있어 불산이 유출된다면 부여, 논산, 공주 등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 운행 중단이라는 국익적인 손실이 발생함. 이런 유해업체가 들어올 때에는 주민들과 공청회도 열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옳는데 공주시와 충청남도는 이런 절차를 한 두번만 거치고 허가를 내주었음.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여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음. 공장 허가는 공주시에서 해 줬다 해도 이들 업체와 MOU를 작성할 때 도지사가 참석해 서명을 한바 있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원 발생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장에 가서 이들과 함께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부탁함.

A1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다면, 특히 생명이나 환경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면 방지할 수 없음. 한 번 더 챙겨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위험한 사업장인지 점검해서 말씀 드리겠음.

Q2 백제문화제 격년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은데 201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가 한 푼도 없음. 국비 8억원이 책정되었고, 농협 기금 출연금 2억원이 있음. 격년제 개최에 대한 의지에 대해 답변 바람.

A2 향후 백제문화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격년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완이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을 책정하였음.

Q3 2014년도 세운 예산이 2015년도 6~7월에 관련 과에서 백제문화제에 지원되었지만 약 9억원과 12억원을 백제문

회제 추진 5일전에 공주와 부여에 지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막중했음. 왜 행사 개최 5일전에 배정했는지?

A3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예산이 늦게 배정된 것은 공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추경이 늦게 의결되었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이사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음. 백제문화제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전 낙운 의원

Q1 그동안 20년 가까이 미뤄온 국제사회의 쌀 의무수입량이 가장 큰 문제로 전국 양곡창고에 100만톤이 저장되어 있음. 농민들은 생산원가 18만원에 이르는 쌀을 12만 5,000원에 투매를 하고, 소비자가 사서 먹을 때는 16만원이 넘음. 올 11월 14일날 농민회가 광화문에 올라가 집회를 했는데 농민들의 한숨과 피폐된 농촌의 문제는 국민 일반에게 어필되지 못하고 폭력논쟁에 묻혀 버림. 농민의 한숨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매년 국회에 가서 여론의 광장을 조성해 주길 바람.

A1 국민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농업 문제 및 농민에 대해서 환기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음.

Q2 우리 도의회가 주치를 하고 정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역도 단위 농업정책을 발전시킬 포럼을 개최해야 되겠음. 경기도, 강원도, 충남·북, 전남·북, 제주 등 9개 광역도의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연례적으로 포럼화하고 농촌살리기를 해서 국민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도 설득해야 함.

A2 농민을 위한 재정확보나 제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여론의 동의를 잘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 보려는 말씀으로 공감함.

Q3 무역이득공유제가 한·중 FTA를 앞두고 실현이 될 것 같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농산물 생산 원가의 15%가 채 안 되는 수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서구 선진국들은 35% 가까운 재정보조를 해 준다고 통계에서 읽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3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는 좋은데 어떤 분야가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었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제도 성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Q4 3농 혁신의 교감을 위해 일선 시군을 순회해서 좀 더 농민들하고 접목된 혁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함.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음.

A4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현장 내에서의 작목반과 농협 및 기타조직 지도자들의 협력이 필요함.

Q5 6차 산업을 장려하려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야 함. 12개 금융기관이 충남도하고 협약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보증해 주면 도에서 출연금으로 이자 2%를 대납해 주고, 개인부담금 2~3% 수준의 자금을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음. 2014년도에는 1만400건 2,405억원이 소상공인들의 창업 내지 증설, 업종변환 자금으로 들어갔고, 그중에서 7.8%가 3농 혁신 6차 산업화에 관련된 곳에 나갔음. 2015년도에는 9월까지 1만3,430건에 3,351억원이 나갔고, 6차 산업에는 495건에 139억원으로 불과 4.2%만 나갔음. 지역 농협이 신보협약에서 빠졌는데 농민이 지역농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6차 산업 내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점유율을 15%까지 올려야함.

A5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음.

Q6 학교 폐교부지에 대해 업자가 와서 체험시설, 견학시설을 만든다고 해 놓고는 태양광발전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위반사항이 아닌지? 폐교재산 활용은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을 준 것임.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이 정당하게 권한 행사를 해야 함.

A6 규정과 절차 내지는 법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결과 적발하지 못했으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음.



김 연 의원

Q1 도청, 산하기관 공무원 및 용역직원만 하더라도 약 5000명에 달하지만, 매년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도청 관계직원은 0.6%에 불과함. 그 이유는 도청직원들 중 상당수가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의료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임. 1명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약 18만원에서 23만원의 의료수익이 발생한다고 함. 도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건강검진만이라도 의료원을 이용한다면 그 수익금은 약 5억 원대로 밀린 약값의 10%를 지불할 수 있음. 도청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이 의료원의 경영적자 해소에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1 공무원들이 건강검진부터 솔선수범해서 공공의료원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음. 도립병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2차 병원이어서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강검진과 의료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도립의료원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의료시장 내에서의 위치 때문에 건강검진 활성화 사업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한 것과 연관이 없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의 범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음.

Q2 도립장애인복지관 모든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경기도나 서울 등 타 시도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도 외부 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을 전담해야 할 도립복지관이 상담사례나 인권교육 등 일상적인 교육도 외부에 의뢰하고 있음. 기본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조차 외부에 의존하는 현상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 내역 중에는 ‘전문직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7만원씩 책정되어 있음. 전문가를 채용했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종사자들이 전체 간부 직원의 과반수를 넘고 있지만 이들의 역량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시군복지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종사자들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A2 도에서 직접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내부직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내부직원들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Q3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관장, 사무국장, 팀장의 시간외수당과 전문직 수당 지급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며, 사무국장의 2015년 6월부터 적용된 호봉수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해 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A3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제수당의 지급에 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이 확실함. 다만 집행과정에서 대한 부분을 감독부서를 통해서 점검토록 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음. 전문직 수당 부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적정하게 지급했음. 다시 한번 점검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면 감사위원회와 협조해 시정토록 하겠음.

Q4 전국의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충남도 교육청 역시 올 한 해 동안 14개 시군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한 학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동안 제대로 된 진로체험 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체험을 했더라도 형식에 그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충남의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직영체제가 아니라 해당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문화의집, 대학, 상담복지센터 등의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심지어 부여교육지원청은 백제문화관리사업소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실적 쌓기식 운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행까지 만전을 기해야 함.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A4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역청의 담당자들이 점검하고 있음. 12월까지 진행이 되면 문제점, 우수한 점 등 사례

를 받아서 1~2월에 충분히 토론했으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음.



김응규 의원

Q1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본예산 10% 안팎의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2014년도 출자·출연기관의 평가결과 12위, 13위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문화재단이 평가에서 15개 기관 중 14위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바람.

A1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부실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외 컨설팅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최하위 기관은 정원 동결, 경상비 세목별 5% 감축, 기관장 재임용을 해주지 않고 있음. 충남문화재단은 작년에 설치되어 기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에 제대로 대비를 못함.

Q2 임명권자인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임기 차이가 있어 전임 단체장 때 임명 받은 임직원과 현재 단체장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단체장과 임기를 맞추는 방안은 어떤지?

A2 타 시·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음.

Q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천안시에 2014년도 17억 5,000만원, 2015년도 25억원을 집행했음. 도지사가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제출한 내용은 무엇인지?

A3 충남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한 것은 국비 108억원을 포함하여 총 352억원의 기반시설 5개 사업임.

Q4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평택은 특별법에 의해 1조8,000억원 정도를 지원 받는데 천안과 아산은 3km 이내에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400억원 정도 기반시설 지원비로 받고 있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가 활성화됐다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었을 것인데

A4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음.

Q5 1994년부터 아연도강관이 수도강관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음. 1994년 충청남도 도내에 아연도강관 급수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규모는 천안이 2만 7,000세대가 넘고, 아산 6,500가구, 보령 4,430가구, 공주 3,100가구임. 아연도강관이 오래되면 녹물이 나오는데 급수관을 개선시켜 줄 복안이 있는지?

A5 이 사업 자체가 시·군과 단지 내에 있는 주민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의를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음.

Q6 정부정책은 적정규모 학교를 위해서 소규모 학교가 고착화되는 학교는 통폐합하는 정책인데 반해서 교육감은 '농어촌 학교의 폐지를 중단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를 도시와 같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특화시키고 성장시키겠다.' 하는데 중앙정부와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 바람.

A6 충남교육청은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그리고 학부모 60% 이상 찬성할 경우 추진하고 있음.

Q7 초등학교원 임용 대기자가 한명도 없는데 기간제 교사가 부족함. 교사 수급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세워야 함.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수전공을 하든 비사범계를 나온 모든 간에 졸업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은?

A7 금년도 초등 같은 경우 전국 교육대학 졸업생 수보다 선발하는 수가 더 많음.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선호하고 충북,

충남, 전북은 기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음. 상반기에는 우수한 기간제 교사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하반기가 되면 임용고사 준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기간제 교사로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데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



정 광 섭 의원

Q1 최근에 만들어진 저수지는 논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버려지는 물을 다시 저수지로 펌핑하여 재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버려지는 물이 별로 없음. 그러나 예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저수지는 논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한번 흘러 내려가면 논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 낭비가 심함. 저수지 하단 냇가에 보를 막아 양수장을 설치하여 버려지는 물을 저수지로 퍼 올리는 시설을 한다면 지금처럼 적은 양의 비가와도 보에서 고인 물을 저수지로 퍼 올릴 수 있어 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1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전력비용이라든지 추진범위나 계획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2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하천 준설사업은 큰 저수지 위주로 하고 있고, 조그만 저수지는 손도 못 대고 있음. 그런 저수지들을 사업비를 국·도비로 시·군에 줘서 일정 부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A2 기관을 따지지 않고 사업효율이 가장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Q3 B지구 물이 염분이 많아 비가 말라죽을 정도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도 없음. 지금 A지구 간월호에는 담수량이 많

아 농경지가 침수돼서 바다로 물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함. 현대 A지구 간월호 물을 B지구 부남호로 넘겨서 B지구 담수호 보충수로 활용해야 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 바람.

A3 AB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는 물을 섞어서 쓰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음.

Q4 24년째 표류하고 있던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이 이달 말쯤 사업자 공모를 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음. 그동안 안면도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개발구역 내 행정규제에 묶여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는 마을진입도로를 포장해 주기 바람.

A4 좀 더 도지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태안군과 상의하겠음.

Q5 25년전 안면도 개발한다고 강제로 이주시킨 이주민들에게 특단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됨. 지금 이주민들이 살던 토지가 공시지가로 90배 정도 뛰었음. 강제 이주된 신 분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A5 이 땅이 지금 도가 수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고 이 속에서 땅이 매각되거나 해서 개발이익이 만들어진다면 그 개발이익을 이 지역에 조금 더 이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방안을 제출하겠음.



홍 재 표 의원

Q1 3농혁신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3농혁신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2년에 3농혁신 위원회가 출범했음.

2013년에는 3농혁신 시군 순화설명회도 개최하고 특화사업도 추진하고, 분야별 계획수립 및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3농혁신정책이 진행되기 시작 했다고 봄. 안희정 지방정부가 3농혁신정책을 주요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A1 3농 혁신은 산업화 이후 도·농간 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FTA 등 시장 개방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추진해 왔음. 성과로는 첫 번째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 시켰고, 두 번째 거버넌스형 농정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농정 기틀을 마련 하였으며, 세 번째 시책사업의 전국적인 파급효과 임.

Q2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우리 내포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마지막 전투지인 태안의 백화산 전투는 동학 농민혁명군들의 마지막 항전지로서, 당시 모여든 혁명군이 3000여 명에 이르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임. 충남도에서는 동학 역사의 보전과 기념을 위해 추모제를 충남도 주관으로 거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기념관을 건립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후대에게 알리고 그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생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람.

A2 도 주관 동학농민혁명 추모제 개최와 관련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도 동학농민혁명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도 전체를 아우르는 기념관 건립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음.

Q3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발전 일환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태안군에서는 기업도시 MOU가 체결되었고, 2005년 8월 25일 시범 사업지로 선정 되었음. 이후, 태안의 기업도시는 총 1,461만㎡로 그중 264만㎡가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지정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음. 고작 골프장 2곳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태안의 기업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 태안군과 협의해서 전문가팀이라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해주기 바람.

A3 신도시 성격의 대단위 개발계획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 확보 및 투자자 유치가 어려웠음. 태안군 및 현대도시개발주식회사와 함께 홍보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 모 기업 자동차연구시설도 그 지역 내 유치가 될 것으로 보여 짐.

Q4 지방도603호선의 끝 지점인 태안군의 이원면 내리지역과 국도38호선의 서산시 대산읍의 독곶지역은 직선거리로 2.5km인데, 5분도 채 안 걸리면 갈수 있는 곳을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자동차로 1시간 40분 이상 달려가야 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함. 이원-대산간 연륙교 건설이 하루빨리 건설되어 서산의 대산지역과 태안의 이원지역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충남도의 역할과 책임이라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해주기 바람.

A4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하여 수년전부터 서해안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지금 연륙교 구간이 미시행 구간으로 남아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앞으로 우리 도의 SOC사업 중 연륙교 건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하겠음.

Q5 안면-보령간 연륙교 건설의 준공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안면-보령간 연륙교 건설로 천혜의 관광지인 안면도가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A5 안면도 관광지에 대해 새로운 개발사업자 및 태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상품을 개발해서 안면도가 그냥 스쳐지나가는 지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 이와함께 안면도 진입을 수월하게하기 위해 국도 77호선 확장을 태안군과 함께 중앙부처 설득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맹 정 호 의원

Q1 충남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농특산물인 으뜸 Q마크는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했다는 마크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하여 양질의 제품만을 엄선하여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현재 지정현황을 보면 총 220개 제품이 있음. 이를 나눠보면 농수축산물류가 80개, 가공식품류가 140개임. 145개 업체의 52개 품목이 해당됨.

Q마크 농특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실적을 묻는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충남도의 답변은 지난해(2014년) 학교급식에 사용된 Q마크는 쌀 16억4천만원, 김치 22억7천만원 등 26개 업체 15개 품목이며 금액은 55억 6천만원임. 이는 145개 업체의 18%만 납품에 참여했다는 결과이며, 52개 품목의 29%만 해당되는, 조금은 부끄러운 실적임. 똑같은 질문에 충남교육청이 답변한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농특산물을 구입한 당진과 아산시만 Q마크 구입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입 현황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물론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많은 Q마크가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을 거라 믿음.

충남도가 도지사의 이름을 걸고 지원하는 Q마크의 학교급식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충남교육청 소속 학교급식 담당자 5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으뜸 Q마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1%, '잘 모른다'는 응답이 20%, '들어는 봤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했음. 또한 '학교 급식에 사용한 농특산물은 몇 개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10개 이하'가 60%, '11~20개 사이'가 29%였음. '왜 학교급식 관계

자들은 Q마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홍보의 부족'이라는 답변이 48%, '입찰의 제약'이 27%, '낮은 신뢰도'가 5%를 차지했음.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한 영양교사는 "으뜸 Q마크가 품질에는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 학교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사군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학교급식 담당 선생님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학교급식에 충남의 농특산물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면 Q마크에 대한 홍보를 부탁함.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Q마크에 대한 홍보가 절실함. 막연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이 아니기에 학교급식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Q마크 홍보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함.

A1 지적한 영역들을 하나하나 더 살펴서 이후의 3농혁신 과정에 잘 반영하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새마을운동 사례처럼 3농혁신 정책이 농촌, 농업에 새로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겠음.



장 기 승 의원

Q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서에는 교육감이 서명한 반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비서실 직원이 서명하였는데, 교육감이 아닌 비서실 직원이 직접 나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와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권한 외 행동을 한 것임. 이는 비정규직 전체를 무시한 처사이고 자격 없는 직원들이 왜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는지 의문이

들. 이런 사례가 지속될 경우 공조작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감과 간부 간의 소통이 부재한 탓이며 교육이 정치에 물들어서는 안 될. 이렇게 자격 없는 비서실 직원이 합의서에 서명한 행위는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비서실 직원이 서명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A1 당초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장과 교육감이 직접 대화와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음. 하지만 노조와의 본 협약이 아닌 대화 내용을 교육감이 직접 합의서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절차에 적절치 않아 대화에 참여한 비서실 소속 직원이 서명하게 됨.

Q2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2014년도 급식비 미징수 현황을 보면 731개교에 근무 중인 3,919명이 2,742백만원의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5년도 8월말 현재 급식비 미징수 현황을 보면 733개교에 근무 중인 3,884명이 1,666백만원(1년간 3,332백만원)의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았음. 현재 비정규직 급식비는 월 10만원으로 행정직 급식비 13만원에 못 미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이 밥을 먹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정규직 급식비는 원칙적으로 모두 납부하도록 차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와 교육감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A2 정액급식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 시 급식비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급식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교급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Q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와 관련하여 2015.6.1.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음. 위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상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이 회복되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한 단체협약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A3 2015.11.16.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위는 '법정

노조' 상태이고, 고용노동부의 '법정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위가 변동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와 도 교육청의 입장임.

Q4 법정기구가 아닌 단체에서 충남교육청에 서명운동 공문 시행을 요구한다고 하여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산하기관과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행한 것은 올바른 행정을 펼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람.

A4 비록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평소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해 온 터라 공문을 시행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제282회 임시회 제283회 정례회

5분 발언



홍성현 의원

[본회의 2015. 10. 1]

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유명무실

일반 대관 신청 무시, 도에서만 독단으로 사용...

내포신도시 발전 저해

도민에게 동등한 대관 이뤄질 때 비로소 문화·예술 향유 가능해질 것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 신청하면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청남도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충청남도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2015년도 충남도청 문화예술회관 사용 현황을 보면, 1월에서 9월까지 133건을 사용 허가하였는데 133건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대관 신청에 의한 일반대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반 대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사용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충청남도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우선적으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관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내포신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광섭 의원 [본회의 2015. 10. 1]

천수만 B지구 간척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극심한 가뭄 수확 앞둔 벼 말라죽어 최대 120억원 피해 불가피...농민 시름 깊어
도내 7개 시·군 바다 매워 농사짓는 간척지 60~70% 말해...장기적인 대안 마련 시급

긴 가뭄으로 간척지인 B지구 담수호 물의 염도가 높아지고 농경지, 즉 논바닥에서 염기가 올라 일 년 내내 힘들게 농사짓는 벼가 여물지도 못 하고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 충남 서해안 지역인 아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등 7개 시·군은 바다를 매립하여 농사짓는 간척지가 거의 60~70%라고 본다. 농업용수 사정이 좋은 지역은 괜찮겠지만 농업용수

가 부족한 지역은 B지구와 같이 피해지역이 있을 거라 예상된다. 이 긴 가뭄에 피해액이 120억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어려운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인철 의원 [본회의 2015. 10. 1]

충남형 생활임금지원 조례 제정 촉구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고려한 생활임금 지급...최소 생활 영위하도록 도와야
서울 노원,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의 경우 재정형편 고려...107%~131% 생활임금 지급

201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5,58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임금을 산출할 경우 월 1,166,220원이다. 실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월 116여만원의 임금으로 실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생활임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으로 최저임금의 107.1%~131% 가량을 생활임금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1인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충청남도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제도적 준비를 통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계약업체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충청남도 집행부와 도의회에서도 이 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임금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김연 의원 [본회의 2015. 10. 1]

정부 교부세 빌미로 한 복지사업 간섭 멈춰야

지방교육세법 및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정책 지자체 권한 침해 우려
사업 취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에 족쇄로 작용...지자체 복지사업 간섭 여지 커

지난 8월 11일 정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충남도의 유사중복 정비 대상사업은 총 41건으로 152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독거노인의 안전과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아동센터와 요보호아동 대상 사업, 중증장애인 수당,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지원, 장애인 재활사업 등 위주로 우리사회에서 돌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600만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국민이 임시로 중앙정부에 국세로 냈다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돈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정안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에 대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길행 의원 [본회의 2015. 10. 1]

극심한가뭄에 따른 장·단기적 대안 제시

바닷물 담수화 사업 및 백제보와 보령댐 있는 관로 사업 조속 착공돼야
도 강수량 평년대비 47%에 그쳐...2025년이면 6만8600㎡의 물 부족 예상

금년 우리도 강수량은 평년 대비 47% 밖에 안되는 실정으로 심각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최악의 경우 내년 3월이면 저수지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가뭄이 해소되길 바라는 21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2가지만 요청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물 절약 운동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요청한다.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절수캠페인 효과는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이를 도정홍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린다. 아울러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백제보-보령댐 관로사업이 조속

히 착공될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공조를 요청드린다. 두 번째 장기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물 환경을 고려하여 댐을 중심으로 유역을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는 총량개념의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대형 관정 개발과 칠갑호의 지방상수도 활용 등 물 자원 확보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닷물의 담수화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드린다.

서형달 의원 [본회의 2015. 10. 8]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자체에 대한 대책 촉구

전국 78개 시·군, 충남 4개 시·군(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해당
충남교육 재정에 악영향...교육 질 저하는 물론 교육 불균형 심화 우려

그동안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본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78개, 충남은 계룡시, 부여, 서천, 청양군 등 4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각 기관·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규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한시적으로나마 4개 시·군의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용필 의원 [본회의 2015. 10. 8]



내포신도시 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 촉구

SK 그룹 등 15조5,000억원가량 투자 계획 발표...투자 방향 충남으로 아꼴어야
형식적 중소기업 수준의 MOU 체결 멈춰야...경기도 기업 유치 사례 충남도 배워야 할 때

삼성이 경기도에 15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삼성전자의 단계별 투자를 희망했던 충남도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기까지 김문수 전지사는 삼성을 위한 배려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삼성로라는 길까지 만들어 주었으며 결국 삼성은 신규투자를 평택 고덕 산업단지로 하였으며 지금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안희정 도지사는 어떤가? 외자유치 MOU체결은 전임지사와 경쟁이라도 하듯 다니고 있으나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반문한다. 83년만에 충남도청 내포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이렇게 허허벌판을 만들어도 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조 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내포에 SK가 투자하도록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길 제안한다. 그렇게 될 때 외부 수도권 인구 유입이 되어 예산권역 내포신도시 아파트 착공이 되어지고 예산읍과 홍성읍도 동반상생 할 것이다.



송덕빈 의원 [본회의 2015. 12. 16]

도 교육청 도의회 파견 직원 홀대론 제기

최근 5년간 승진자 단 1명에 불과...이들의 업무 범위 등 고려할 때 승진을 높여야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청렴과 공정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하면서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도덕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충청남도 정원조례에 맞게 승진인원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현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기준을 보면 총 인원 4,085명 중 5급 이상 정원은 8.5% 이내로 되어 있고, 이를 산출하면 322명이 된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152명에 불과하다. 둘째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 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

이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은 기술직을 포함하여 152명이 있으며 2011년부터 5년간 승진자는 146명이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는 11명이 파견형태로 근무하면서 각종 의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정한 인사란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기에 앞서 조직을 위해 어려운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것이 공정한 인사다. 정말 힘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켜 봐 주기 바란다.



이종화 의원 [본회의 2015. 12. 16]

충청소방학교 열악한 교육 인프라 확충 촉구

시설 열악하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 차질 불가피...실전상황 미숙한 대응 우려
전국 8개 지방소방학교 중 가장 열악한 교육 환경...인명구조 훈련장 등 25% 수준

충청소방학교는 1993년 개교하여 대전과 충북 등 4개 시도의 공동운영에 따라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입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안전교육과정 등 총 4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6명의 교직원과 2개의 교육훈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인명구조 훈련장과 화재진압훈련 시설이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입소방관들에게 필수적인 소방차량 운전 실습교육은 교육기간의 단축과 교육장의 시설부족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도 시키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소방학교가 공주시에 조성 중인 교육연구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충청소방학교도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행스럽게도 도내 주요 소방기관과 도민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빨리 충청소방학교의 이전과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화 되는 재난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관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민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서형달 의원 [본회의 2015. 12. 16]

다문화가정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급속한 다문화 사회화에 따른 이질 수용과 이해 위한 노력 필요성 제기

전체 학생 682만명 중 1.4%에 달할 만큼 다문화 학생 증가세 뚜렷...차별 없는 교육 당부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국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은 8만 2,036명으로 전체 학생 681만9,927명 중 1.4%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과 학생 수 증가가 폭발적인데 비해 사회와 교육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코드'가 여전하다는 것은 곧 학교에 다니기 힘들다는 얘기와도 통한다. 이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 부적응 및 이탈로 이어지고 우리사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

래를 약속받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과 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대응 및 협력적 활동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도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원태 의원 [본회의 2015. 12. 16]

음영지역 해소 위한 도 차원 대응책 마련 주장

터널, 계곡 등 전화나 라디오 수신 차단 사례 발생...

재난 시 신속한 대응 어려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개설하는 모든 도로와 터널지역 등에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동안 전화 통화, 라디오 수신 등이 차단되는 사례가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중계설비를 구축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터널설계 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 다음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밀원확보이다. 6~70년대 정부에서는 산림녹화를 위하여 많은

수종의 나무들을 식재하였다. 그중의 하나인 아까시 나무도 식재하여 양봉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밀원으로 제공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아까시 나무는 거의 다 벌목되고 경제림으로 수종 갱신을 하고 있어 양봉업자들은 밀원 확보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봉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제적인 도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남도에서 앞장서 식목행사라든지 각종 도로개설 시 가로수로 밀원 수종인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강용일 의원 [본회의 2015. 12. 16]

구제역 예방 위한 백신접종 강화 제안

구제역 발생 국가와 도 위상 중대한 영향...축산 농가 수출 판로 막히는 등 손실 부추겨
구제역 대비한 선제적이고 범국민적 운동 전개 필요성 제기

충남의 구제역 발생현황은 2014년 12월 16일 천안을 시작으로 6개 시·군 70건이 발생되었으며, 시·군별로 보면, 천안 17건, 공주 2건, 홍성 36건, 보령 5건, 아산 9건, 당진 1건으로 30,682두가 살처분되었고, 살처분 금액은 14억원, 보상금은 61억, 128개의 방역 초소 운영에 43억원이 투입 되었으며, 방역 초소와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만도 14,000여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구제역 발생 원인으로는 일부 농가의 백신 및 방역미흡과 가축 운반차량 등이 확산의 주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감염개체 색출을 위한 혈청검사결과 기존 구제역 발생 시·군을 중심으로 총 68건의 구제역 야외

감염항체 검출농장이 확인되어 재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충청남도의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재정 및 인력을 낭비하는 구제역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꼼꼼한 백신 접종은 물론 방역·통제 등과 축산농가 및 도민의 의식을 높이는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청남도, 의회, 나아가서 국가가 모두 합심하여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선언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축산농가들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식선언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정정희 의원 [본회의 2015. 12. 16]

송전선로 억제 위한 공조체제 구축 제안

5개 시·군 합동으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발판 마련 TF팀 구성 등 필요성 제기
2019년까지 당진 등 4개 시군에 955만KW 발전 시설 증가 예상...대응책 마련 시급

도내에 건설되는 화력발전소 규모는 전국 최고로 가동현황을 보면 당진, 보령, 태안, 서천, 서산 등 5개 시·군에서 총 158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2019년도까지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955만kw 추가 발전 시설이 증설 또는 건설된다. 이 때문에 송전선로, 첩탑설치 수량은 증가될 전망이다. 신당진변전소로 인해 7개 노선에 107개 첩탑이 홍물로 솟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퇴락해 가고 있다. 우리 도는 지중화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충남도가 나서야 한다. 첫째, 송 변전소 주변 지역

이 피해 볼 수밖에 없도록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등의 법률이 합리적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도가 5개 시군과 공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전력이라는 거대 공기업과 싸우는 싸움이고, 정부에 대해 양보 없이 맞서야 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셋째, 발전소 주변지역 오염물질 배출과 기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현존하는 피해와 미래의 피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도내 문화와 역사 자원 발굴 위한 현장 활동 돌입

10.6 ~ 7 - 문화복지위원회

- 서산 해미읍성 · 마애삼존불, 공주 자연사박물관 · 동학사 등 도내 관광자원 점검



격렬비열도 찾아 서해 전진기지화 가능성 타진

10.5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관광기반시설 보강 등 관광 활로 마련 제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해법 모색

10.5 - 행정자치위원회

-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개발사업 도유재산 심사 위해 현장 활동



특색 있는 소규모학교 육성 힘써야

10.5 ~ 6 - 교육위원회

- 농산어촌 및 도서 교육현장 방문, 작은 학교 희망 찾기 방안 등 모색



가뭄 대책 논의

10.6 ~ 7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가뭄 극심한 태안군 송현저수지 등 찾아 상황별 대처계획 및 현장 점검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길행)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6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심사했다.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서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진정 및 건의사항 건에 대하여는 만원인들의 처리 방향을 확실히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



강용일 의원



김동욱 의원



김응규 의원



맹정호 의원



유병국 의원



유찬종 의원



정정희 의원

행정자치 위원회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근거 마련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낙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입대의 교원확보 문제, 국비 확보 노력 미흡, 세입예산 관리 소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용호 의원은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모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목표액 369억원 중 도와 시·군 출연금을 제외하면 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지상 의원은 “예산원가검토에 참여하는 민간 참여 전문가를 실국에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민참여 예산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참여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병국 의원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그동안 추진실적이 전무하다. 남북교류기금 조성 확대하고 대북 사업 민간단체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철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있다”며 “농촌현대화사업, 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 등이 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

했다. 조길행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변동 폭이 큰 것은 도의 재정운영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철저한 추계와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형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시·군별 사업비 매칭 비율이 일괄적이지 않다”며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일관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치연 의원은 “청양도립 사격장 부지 보상이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보협력관실과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서 백낙구 위원장은 “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정 홍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도민이 도정을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전부개정조례는 지역미디어 발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김동욱 의원은 “본예산 절감예산을 추경에 변칙 계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자위는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토록 한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7건을 가결했다.



백낙구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



유병국 의원



윤지상 의원



이기철 의원



이용호 의원



조길행 의원



조치연 의원

문화복지 위원회



오배근 위원장



유찬종 부위원장



김연 의원



김원태 의원



김종필 의원



윤석우 의원



아공휘 의원



정정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찬종 위원장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가 대체적으로 천안과 아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도민 서비스 질과 만족도를 높여 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일부지역의 경우 복지관이 없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들을 배려한 지역별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우 의원은 “이용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타 기관과 운영시스템이 비교되기 때문”이라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주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정희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이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도내 보행 전문 인력 자체적 양성 프로그램이 없다. 점자블럭과 표지판, 안내판 등 편의 시설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민 복리 증진, 사회 약자 배려 촉구



김원태 의원은 청소년진흥원과 공주의료원, 역사문화연구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의 상당액이 운영위 회의에 지출하고 있어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제대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며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불필요한 회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공휘 의원은 “또래 상담 자격증의 경우 서로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해 복리 증진,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오배근 위원장은 “위원들이 도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한 결과, 어두운 곳을 밝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향후 문화와 복지를 향상할 분야별 조례를 계속해서 발굴, 제정하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연 의원은 “사회보장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비록 복지재정이 녹록치 않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회보장사업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김종필 의원은 “과감한 경영개선 및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원의 적자 진료과에 대한 통폐합 등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농업경제 환경위원회



가뭄 대책 전형적인 탁상행정 비판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열 위원장은 “충남 TP에도 소속 직원이 행정지원 실장 겸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영위원회 참석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나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실 인력확충과 기능 강화를 통해 출연기관에 대한 도의 역할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규 위원은 “충남 TP가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체 중 아직 TP를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홍보 활동에 더 힘써 달라”고 제안했다. 전낙운 위원은 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0개의 소규모 저수지 준설보다 1개의 대형 저수지 관리가 더 절실하다”며 “도는 예당저수지나 탐정호 등 대형 저수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형 저수지 준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 가뭄이 충남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재표 위원은 “22만의 저수량을 보관할 수 있는 태안 송원저수지를 방문한 결과, 불과 8,000을 늘리기 위해 5,000만원을 투입해 준설하고 있다”며 “3.6%의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준설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에게 준설을 했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뭄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효율성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복만 위원은 “농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얼마나 방문했는지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도민을 위해 완벽하게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용필 위원은 “중국과 투자협약 및 MOU 체결 등 관련 움직임이 많다”면서도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협약과 MOU 체결 등은 법적인 사항이거나 강제 조항이 없다”며 “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관리로 충남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용필 위원은 “도의 경제 살리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이 유치전과 후가 다르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기업의 어려운 현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의원은 ‘충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토대를 마련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하여금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당장 눈에 보이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홍열 위원장



강용필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문규 의원



김복만 의원



강용필 의원



전낙운 의원



홍재표 의원

안전건설 해양소방 위원회



자연재해, 범죄 등 안전지수 충남도 꼴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는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충남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화 위원장은 “도 출원기관 경영평가에서 2014년 라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역시 15개 기관 중 다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하위 판정을 받은 이유는 경영에 대한 무관심 또는 방만한 운용으로 예상된다”며 “경영 안정을 위한 지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2012년 7%였던 노인안전사고 발생률이 올해 10%까지 치솟았다”며 “일본의 경우 노인 운전자는 차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 만큼 다른 선진국 사례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응규 의원은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민안전처 지표조사에서 도가 안전지수 평가에서 3등급, 화재·교통·자살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다”며 “충청권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어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지 못했다”며 “지역안전지수 공개는 지역 안전에 책임성을 묻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인철 의원은 “민생 6대 분야 단속 결과를 보면 1만3,404개 대상 점검 결과, 2,129개소를 적발했다”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중국산 농산물 등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당부했다. 예산심사에서 위원들은 도서지역 헬기 이착륙장 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사업비가 무려 3억1,500만원이 계상됐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 259억8,500만원 중 1억8,100만원이 삭감돼 하천 사업의 부실을 우려했다. 이밖에 ▲염치~삼거국지도 확포장 공사 사업비 88.8% 감액 ▲성연~운산 국지도 확포장 공사비 23억 감액 ▲가야곡~양촌 국지도 확포장 공사비 20억 감액 등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신재원 의원은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50% 증액됐다”며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진환 의원은 “수산물 고교육성화 지원 사업이 올해 예산보다 60% 가깝게 감액 편성됐다”며 “국비 지원이 감액돼 수산물 고교육성의 전문성 저하가 예상된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이환 의원은 “유부도, 태안군 외도, 가의도에 대한 성장촉진 지역 개발 사업으로 6억9,800만원이 편성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며 “사업 위치 선정과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



신재원 의원



오인철 의원



이진환 의원



정광섭 의원



조이환 의원

교육 위원회

교육청 본예산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349억7000만원↓, 누리과정 예산 등 536억원↑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현)는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맹정호 의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자유학기제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익환 의원은 천안·아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 수업료 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받는 학생과 내지 않는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수업

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고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의원은 “민간위탁으로 채용하는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의 경우 학교시설사용료로 9%를 내고 있다”며 “내부 강사인 교사는 전혀 부담이 없다.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질타했다.

장기승 의원은 충남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 표발의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 받는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만을 교직원 단체로 인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라며 “재정 위기를 맞은 도 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덕빈 의원은 시설사업비 3억 이상 편성된 서산 등 4개 지역 학교 6곳을 차례로 방문, 학교 전반의 시설물 상태를 점검했다. “부족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시설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선해야 한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예산 심의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예산 누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서형달 의원은 “홍성고가 내포로 이전하는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체험 연수비 4,200만원을 기금으로 포함시켰다”며 “예산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은 “학교에 비치된 악기들이 내용연수도 채우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 지시해 물품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성현 위원장은 도 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46건의 예산이 과다 편성 됐거나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액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본예산 349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누리과정(만3세~5세 보육료) 지원 예산 536억원을 증액했다.



홍성현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김종문 의원



서형달 의원



송덕빈 의원



유익환 의원



장기승 의원

3농혁신 등 정책특별 위원회

도정 핵심 추진 과제 3농혁신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낙운)가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도정 핵심 과제인 3농혁신에 대한 허와 실을 점검하고 나섰다.

정책특위는 첫날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와 연산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황산벌권역 종합개발사업 현장 등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을 만나 고질적인 농업의 현실과 실체를 논의했다.

전낙운 위원장은 “충남의 경우 쌀 수매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지체가 태반”이라며 “전남과 전북 등의 경우 수매가를 4만5000원~5만원가량 선지급했다.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충남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자리에서 “228개 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량판매가 안 되다 보니 판로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수수료 안정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형달 위원은 “농협이 혁신모델을 선정해 끌고 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중·소농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연계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위원은 황산벌권역 사업 현장에서 “도내 마을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사업이 2005년부터 61개 권역으로 확대됐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곳이 있다”며 “전기세도 내지 못하는 등 경영 부실이 심각하다. 당시 관이 주도하다 보니 이러한 폐해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김원태 위원은 “권역별 사업의 중심인 투어센터와 가공센터, 체험시설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 주도의 지원보다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절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도 본예산 94억854만원 도 교육청 본예산 328억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2016년도 충남도 예산 5조6,280억원(기금운용계획 제외) 충남교육청 예산 2조8,295억5,200만원을 심의한 결과, 각각 94억854만원과 328억1,646만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예산은 ▲행정지치위 소관(19건) 16억3,600만원 ▲문화복지위 소관(18건) 23억3,700만원 ▲농경환위 소관(15건) 45억1,238만원 ▲안전해소위 소관(11건) 9억2,274만원 등이 삭감됐다.

충남교육청 예산은 ▲교육환경개선(대응투자) 100억원 ▲유치원방과후과정 32억4,300만원 ▲교무행정사운영 27억5,000

만원 ▲폐교재산관리 등 22억3,528만원 ▲교원인건비 20억원 ▲컨설팅장학운영 15억원 등이 삭감됐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 및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558억1,646만원을 증액했다. 이번 예결특위 심의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국비를 매칭했더라도 사업이 불요불급하거나 소비성 사업일 경우 과감하게 '메스'를 댔다는 점이다.

김복만 위원장은 "내년도는 민선 6기의 터닝포인트가 될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김용필 의원
(11.10)

도 과채연구소 품종 육성 연구 및 영농활용 성과 타 시·도에 비해 미흡

전북의 경우 토마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여는 등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충남은 수출을 위한 모임 등을 개최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딸기를 보더라도 오래전 개발한 설향과 매향, 금향에 의지하고 있다. 과채연구소가 신품종 개발을 게을리 하고 있다.



송덕빈 의원
(11.11)

충남도교육청 학교 밖 재산 36% 수년째 방치

충남도교육청 공유재산의 36%에 달하는 임야 및 학교림 부지 181만5271㎡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36%에 달하는 임야 및 학교림을 제대로 활용 한다면 매년 수천만원 이상 재정이 적립돼 학생들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익환 의원
(11.13)

도교육청, 민원처리 소극적... 해결하려는 노력 미흡

2011년부터 5년간 두 차례 이상 비슷하거나 같은 건으로 제기된 민원은 총 325건이다.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으므로 지속해서 제기된 것으로 민원을 수차례 반복하게 하여 도민불편을 유발했다.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제대로 못 한다는 방증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을 응대해야 한다.



김명선 의원
(11.16)

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신설 필요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지역을 관할하는 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의 경우 3만4,862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맡고 있다. 1만5,373개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보령지점(보령, 서천, 청양)보다 2배 이상 수요가 많은 셈이다. 신규 보증 역시 올해 기준 454개로 늘어나는 등 서해안지역의 경제가 팽창하고 있다. 당진 지역의 보증 수요와 경제력을 분석할 때 설치할 근거는 타당하다.



맹정호 의원
(11.16)

교사 명퇴수당 받고 다음날 기간제 교사로 근무... 명퇴제도 무색

최근 3년간 명예 퇴직한 교사 922명 가운데 23%(213명)가 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교사의 34%(72명)는 퇴직 다음날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돼 교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홍재표 의원
(11.17)

도내 상수도 연간 540억원 줄줄 댔다

제한급수가 진행 중인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의 평균 누수율은 25%이다. 예산군이 36.4%로 가장 높고, 서천군(36.1%)과 태안군(30.6%)도 충남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노후 상수도관을 통해 적잖은 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빠져나가고 있다. 그만큼 수도물 낭비가 심각하다. 서울시(3.2%)는 물론 전국 평균(10.7%)보다도 훨씬 높다.



김연 의원
(11.18)

공주 동학사 인근 '무인텔' 우후죽순 우려

무인텔이 우후죽순으로 동학사 전체를 뒤덮고 있다. 비록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50m)에 포함되지 않지만, 계룡산 초입부터 늘어선 무인텔의 존재는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가족,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문 의원
(11.18)

도교육청 스쿨넷 사업 예산 낭비

도교육청의 경우 인터넷 사용료가 경북교육청 대비 2.4배인 74억원으로 30억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1,007개 학교가 있는 경북은 인터넷 사용료가 31억원에 불과했다. 경북교육청처럼 14개 교육지원청 전산실을 제거하고 도내 742개 학교들을 도교육청에서 집선해야 한다. 예산을 절감하면 교육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조이환 의원
(11.18)

서천과 군산 불합리한 조업 구역 조정 필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이전 충남의 도서였던 연도, 개야도, 죽도, 어청도 등을 전북 옥구군(군산시)에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하게 해상 경계가 획정,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현 의원
(11.26)

도교육청 누리예산 1,073억 편성 재차 촉구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사이 정작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본다. 하늘의 별 따기였던 국공립 유치원 입학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3만830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것이 도교육청이 실현하려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 34건

조례안 29, 동의안 3, 결의안 2

원안가결 29, 수정가결 4, 보류 1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조치연 의원 (조길행, 김동욱, 백낙구, 이기철, 이용호, 윤지상 의원)	원안가결	일선 현장에서 국·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에 헌신봉사 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역량 강화 및 화합을 위해 매년 자원해 오고 있는 워크숍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 마련
조례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기철 의원 (백낙구, 조치연, 조길행, 유병국, 윤지상, 이용호, 김동욱 의원)	원안가결	충청남도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전개 하는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 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조례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백낙구 의원 (이기철, 조치연, 김동욱, 윤지상, 이용호, 조길행, 유병국 의원)	원안가결	충청남도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 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조례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병국 의원 (조이환, 조길행, 백낙구, 김동욱, 이기철, 조치연, 이용호, 윤지상 의원)	원안가결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권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인권지수개발, 인권영향평가, 인권센 터 설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충청 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조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보류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설립 및 지원근거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 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전부 개정 ※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설립 이후 운영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보류)
조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4. 10. 14. 법제처와 충남도가 협업으로 발굴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내용, 인용조문 개정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개정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종필 의원 (오배근, 김원태, 정정희, 윤석우, 이공휘, 김연 의원)	원안가결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복합 공간으로써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등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
조례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재정법」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관한 규정’ 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조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예비노년세대에게 노후 설계,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발굴, 사회공헌활동 연계 등 예비노년 세대의 노후준비, 활동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정
조례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희망마을의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마을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민주도의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
조례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복만 의원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전낙운,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조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환 의원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의원)	원안가결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정부와 충청남도의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 조례의 근거 법령명과 약칭 규정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조례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화 의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신재원 의원)	원안가결	우리 도의 건축문화 진흥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 및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화 의원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의원)	원안가결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과 정부 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규 명칭 및 인용 조항의 변경과 불합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 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
조례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신재원 의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의원)	원안가결	도시재정비 사업의 촉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인용 조례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
조례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오인철 의원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및 고령자·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민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조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응규 의원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의원)	원안가결	충청남도의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광고물 전시회 및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비 지원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및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약칭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통일되게 정비
조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광섭 의원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의원)	원안가결	조례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조례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응규 의원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의원)	원안가결	조례의 근거가 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주체를 도지사로 한정토록 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조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조이환 의원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의원)	원안가결	조례의 상위법인 「물류정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명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
조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광섭 의원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의원)	원안가결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임용과 관련하여 상위법 규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도서지역 농어촌 마을에 “화재예방 및 진화설비”를 설치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안전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조이환 의원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의원)	원안가결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및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민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조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4년 10월 14일 법제처와 충남도가 협업으로 발췌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내용과 인용 조문 개정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
조례	충청남도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회계 운용의무화에 따라,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를 세입으로 하는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운용
조례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종문 의원 (홍성현, 맹정호, 송덕빈, 유익환, 김석곤, 서형달, 장기승,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학교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수용,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제반 행·재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
조례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투명성 제고)을 요구(2013.12.13.)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러 차례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
조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된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
조례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장기승 의원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송덕빈,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의원)	원안가결	최근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학교 내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내 교통안전 확보

안전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교육위원장	원안가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동의안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관련 도유재산매각 등 2건의 도유 재산 처분에 대한 동의 <table><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안 건 명</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재 산 현 황</th><th rowspan="2">비 고</th></tr><tr><th>종류</th><th>건수</th><th>면 적(㎡)</th><th>재산가액 (천원)</th></tr><tr><td>1</td><td>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관련 도유 재산 매각</td><td>처분</td><td>토지</td><td>240필지</td><td>2,412,744.60</td><td>135,903,974</td><td>일반 회계</td></tr><tr><td>2</td><td>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관련 도유 재산 매각</td><td>처분</td><td>토지</td><td>179필지</td><td>429,014</td><td>19,253,787</td><td>특별 회계</td></tr></table>	연번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건수	면 적(㎡)	재산가액 (천원)	1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관련 도유 재산 매각	처분	토지	240필지	2,412,744.60	135,903,974	일반 회계	2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관련 도유 재산 매각	처분	토지	179필지	429,014	19,253,787	특별 회계																																																														
연번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건수	면 적(㎡)	재산가액 (천원)																																																																																								
1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관련 도유 재산 매각	처분	토지	240필지	2,412,744.60	135,903,974	일반 회계																																																																																							
2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관련 도유 재산 매각	처분	토지	179필지	429,014	19,253,787	특별 회계																																																																																							
동의안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수정가결	가칭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신축 등 8건의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대한 동의 <table><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안 건 명</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재 산 현 황</th><th rowspan="2">비 고</th></tr><tr><th>종류</th><th>면 적(㎡)</th><th>재산가액 (천원)</th></tr><tr><td>1</td><td>가칭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신축</td><td>처분</td><td>건물</td><td>3,895</td><td>14,582,000</td><td>원안 가결</td></tr><tr><td>2</td><td>가칭 '푸름유치원' 신설</td><td>처분</td><td>토지</td><td>3,300</td><td>1,330,108</td><td rowspan="2">일반 가결</td></tr><tr><td></td><td></td><td></td><td>건물</td><td>3,861</td><td>7,035,000</td></tr><tr><td>3</td><td>가칭 '교신중학교' 신설</td><td>처분</td><td>토지</td><td>18,561</td><td>8,742,231</td><td rowspan="2">원안 가결</td></tr><tr><td></td><td></td><td></td><td>건물</td><td>13,333</td><td>21,337,000</td></tr><tr><td>4</td><td>올라리박 재산 (충청남도예신교육지원청) 지류</td><td>처분</td><td>토지</td><td>65,326</td><td>1,209,034</td><td>원안 가결</td></tr><tr><td>5</td><td>올라리박 재산 (육원초등학교) 처분</td><td>처분</td><td>토지</td><td>14,480</td><td>359,782</td><td>원안 가결</td></tr><tr><td>6</td><td>삼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td><td>처분</td><td>토지</td><td>1,721</td><td>1,075,625</td><td rowspan="2">삭제</td></tr><tr><td></td><td></td><td></td><td>건물</td><td>880</td><td>1,924,137</td></tr><tr><td>7</td><td>가칭 '장산지역기숙중학교' 신설</td><td>처분</td><td>토지</td><td>36,044</td><td>2,747,000</td><td rowspan="2">삭제</td></tr><tr><td></td><td></td><td></td><td>건물</td><td>10,864.50</td><td>24,478,000</td></tr><tr><td>8</td><td>올라리박 재산 (충청남도예신교육지원청) 지류</td><td>처분</td><td>토지</td><td>3,100</td><td>1,190,400</td><td>삭제</td></tr></table>	연번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재산가액 (천원)	1	가칭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신축	처분	건물	3,895	14,582,000	원안 가결	2	가칭 '푸름유치원' 신설	처분	토지	3,300	1,330,108	일반 가결				건물	3,861	7,035,000	3	가칭 '교신중학교' 신설	처분	토지	18,561	8,742,231	원안 가결				건물	13,333	21,337,000	4	올라리박 재산 (충청남도예신교육지원청) 지류	처분	토지	65,326	1,209,034	원안 가결	5	올라리박 재산 (육원초등학교) 처분	처분	토지	14,480	359,782	원안 가결	6	삼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처분	토지	1,721	1,075,625	삭제				건물	880	1,924,137	7	가칭 '장산지역기숙중학교' 신설	처분	토지	36,044	2,747,000	삭제				건물	10,864.50	24,478,000	8	올라리박 재산 (충청남도예신교육지원청) 지류	처분	토지	3,100	1,190,400	삭제
연번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재산가액 (천원)																																																																																									
1	가칭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신축	처분	건물	3,895	14,582,000	원안 가결																																																																																								
2	가칭 '푸름유치원' 신설	처분	토지	3,300	1,330,108	일반 가결																																																																																								
			건물	3,861	7,035,000																																																																																									
3	가칭 '교신중학교' 신설	처분	토지	18,561	8,742,231	원안 가결																																																																																								
			건물	13,333	21,337,000																																																																																									
4	올라리박 재산 (충청남도예신교육지원청) 지류	처분	토지	65,326	1,209,034	원안 가결																																																																																								
5	올라리박 재산 (육원초등학교) 처분	처분	토지	14,480	359,782	원안 가결																																																																																								
6	삼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처분	토지	1,721	1,075,625	삭제																																																																																								
			건물	880	1,924,137																																																																																									
7	가칭 '장산지역기숙중학교' 신설	처분	토지	36,044	2,747,000	삭제																																																																																								
			건물	10,864.50	24,478,000																																																																																									
8	올라리박 재산 (충청남도예신교육지원청) 지류	처분	토지	3,100	1,190,400	삭제																																																																																								
결의안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맹정호 의원 (홍성현, 김석곤, 송덕빈, 유익환, 김중문, 서형달, 장기승,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계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결의안	가뭄 극복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강용일 의원 (김홍열,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충청남도 전역에 닥친 가뭄 피해가 일시적이고 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총 58건

조례안 34, 예산안 7, 동의안 15, 결의안 1, 기타 1
원안가결 45, 수정가결 13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월정 수당 지급기준액을 개정
조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정례회별 운영기간을 당해연도 의정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2회60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6월15일 → 6월1일), 상위법 개정사항 조례 반영 등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
조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설립 및 지원근거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 여 전부 개정
조례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충청남도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
조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도지사-시장·군수간 기능재정립 업무협약 체결 (2014.12.17)의 후속 조치로 바람직한 사무추진 체 계를 확립해나가고자 본 조례를 개정
조례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지방 보조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 부 개정
조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자 2016년부터 추진할 자원봉사 「마일리 지제」 근거 마련
조례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분야」 정비 대상 권고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대표발의 : 오인철 의원 (윤자상, 조치연, 이기철, 이용호, 김동욱, 조길행, 유병국 의원)	수정가결	충청남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 력의 질적 향상 도모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조례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개정(2015.5.18)내용 등을 반영
조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 내포신도시건설본부 한시기구 설치 기한 연장 (1년 / '15.12.31.→'16.12.31.) ● 성공적인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체전준비기획단 인력 보강 등 일반직 정원 7명 증원(전국체전 준비기획단 3명, 농산물검사소 2명, 해외사무 소 2명) ● 119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 등 소 방직 42명 증원(119안전센터 5개소 신설 41명, 소방복합시설 전담팀 1명)
조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4. 10. 14. 법제처와 충남도가 협업으로 발굴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내용, 인용조문 개정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
조례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정희 의원 (윤석우, 김원태, 김종필, 전낙운, 김문규, 김홍열, 유익환 의원)	원안가결	영유아와 모성(母性)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 영 등에 관한 지원사항 규정
조례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정희 의원 (유익환, 윤석우, 김원태, 김종필, 전낙운, 김문규, 김홍열 의원)	원안가결	고령화와 함께 자녀 부양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 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 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 한 사항 규정
조례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연 의원 (오배근, 유찬중, 윤석우, 김원태, 김종필, 이공휘, 정정희 의원)	원안가결	장애인 등 누구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 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제정
조례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종필 의원 (오배근, 유찬중, 윤석우, 김연, 김원태, 이공휘, 정정희 의원)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개정(2015.1.1.)에 따라 '보호자 없 는 병원 사업' 지원근거 마련

안전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충청남도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조례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등에 따라 지역의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조례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소외계층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조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충청남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조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명선 의원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청년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조례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 축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
조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16년 회계연도부터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명시적 근거 없이 지원 불가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 등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명시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하여 석면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조례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명시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하여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조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화 의원 (조이환, 오인철, 김응규, 신재원, 정광섭, 이진환 의원)	원안가결	‘14. 5. 28. 개정된 「건축법」과 ‘14. 11. 29.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충청남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조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오인철 의원 (이종화, 조이환, 신재원, 이진환, 김응규 의원)	원안가결	2015.8.11일자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운영사업”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비스 향상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의 약칙규정 등을 지치 법규입안기준에 따라 정리
조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장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변상금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장비사용료 산출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장비사용료 기준의 잦은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장기승 의원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송덕빈,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의원)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종문 의원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송덕빈, 유익환, 서형달,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대한민국헌법」과 관계 법률에서 보장된 충청남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인권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

안전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2015. 6. 1.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전보·기타 인사관리 권한을 일부 조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																					
조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개정 － 2016. 3. 1자 신설되는 학교 삽입 － 2016. 3. 1자 이전하는 학교 위치 변경 － 2016. 3. 1자 폐지되는 학교 삭제 － 지번주소로 된 학교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조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예산안</th><th colspan="3">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백만원)</th><th rowspan="2">비고</th></tr><tr><th>삭감</th><th>증액</th><th>조정액</th></tr><tr><td>세입</td><td>5,628,034</td><td>－</td><td>－</td><td>5,628,034</td><td></td></tr><tr><td>세출</td><td>5,628,034</td><td>9,408</td><td>9,408</td><td>5,628,034</td><td></td></tr></table>	구분	예산안	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백만원)			비고	삭감	증액	조정액	세입	5,628,034	－	－	5,628,034		세출	5,628,034	9,408	9,408	5,628,034	
구분	예산안	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백만원)					비고																		
		삭감	증액	조정액																					
세입	5,628,034	－	－	5,628,034																					
세출	5,628,034	9,408	9,408	5,628,034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총괄) － 2016년도 : 373,335 백만원 － 2015년도 : 357,930 백만원 － 비교 증감 : 15,405 백만원																					
예산안	2015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예산안</th><th colspan="3">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백만원)</th><th rowspan="2">비고</th></tr><tr><th>삭감</th><th>증액</th><th>조정액</th></tr><tr><td>세입</td><td>6,102,532</td><td>－</td><td>－</td><td>6,102,532</td><td></td></tr><tr><td>세출</td><td>6,102,532</td><td>50</td><td>50</td><td>6,102,532</td><td></td></tr></table>	구분	예산안	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백만원)			비고	삭감	증액	조정액	세입	6,102,532	－	－	6,102,532		세출	6,102,532	50	50	6,102,532	
구분	예산안	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백만원)					비고																		
		삭감	증액	조정액																					
세입	6,102,532	－	－	6,102,532																					
세출	6,102,532	50	50	6,102,532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변경 : 369,215 백만원 － 당초 : 357,930 백만원 － 증감 : 11,285 백만원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예산안</th><th colspan="3">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백만원)</th><th rowspan="2">비고</th></tr><tr><th>삭감</th><th>증액</th><th>조정액</th></tr><tr><td>세입</td><td>2,829,552</td><td>－</td><td>23,000</td><td>2,852,552</td><td></td></tr><tr><td>세출</td><td>2,829,552</td><td>32,816</td><td>55,816</td><td>2,852,552</td><td></td></tr></table>	구분	예산안	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백만원)			비고	삭감	증액	조정액	세입	2,829,552	－	23,000	2,852,552		세출	2,829,552	32,816	55,816	2,852,552	
구분	예산안	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백만원)					비고																		
		삭감	증액	조정액																					
세입	2,829,552	－	23,000	2,852,552																					
세출	2,829,552	32,816	55,816	2,852,552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기금 운용계획 예산규모 － 2016년도 : 31,096 백만원 － 2015년도 : 23,669 백만원 － 비교 증감 : 7,427 백만원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예 산 안 : 3,043,427 백만원 － 기정예산액 : 2,987,671 백만원 － 비 교 증 감 : 55,756 백만원																																																						
동의안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공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등 5건의 도유재산 취득에 대한 동의안 <table><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의안명</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재 신 현 황</th><th rowspan="2">비 고</th></tr><tr><th>종류</th><th>건수</th><th>면적 (㎡)</th></tr><tr><td>1</td><td>공주의료원 기숙사 신축</td><td>취득</td><td>건물</td><td>1 (1동)</td><td>1,436</td><td>3,400,000</td><td>일반 회계</td></tr><tr><td>2</td><td>서산의료원 재활센터 및 격리병동 신축</td><td>취득</td><td>건물</td><td>1 (1동)</td><td>7,175</td><td>17,500,000</td><td>일반 회계</td></tr><tr><td>3</td><td>홍성의료원 응급의료 센터 신축</td><td>취득</td><td>건물</td><td>1 (1동)</td><td>1,503</td><td>3,680,000</td><td>일반 회계</td></tr><tr><td>4</td><td>수산연구소 친환경 양식 특화연구센터 신축</td><td>취득</td><td>건물</td><td>1 (4동)</td><td>2,700</td><td>2,900,000</td><td>일반 회계</td></tr><tr><td>5</td><td>농업기술원 과채시험 연구보상용 토지 매입</td><td>취득</td><td>토지</td><td>1 (4필지)</td><td>9,283</td><td>223,844</td><td>일반 회계</td></tr></table>	연번	의안명	구분	재 신 현 황			비 고	종류	건수	면적 (㎡)	1	공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취득	건물	1 (1동)	1,436	3,400,000	일반 회계	2	서산의료원 재활센터 및 격리병동 신축	취득	건물	1 (1동)	7,175	17,500,000	일반 회계	3	홍성의료원 응급의료 센터 신축	취득	건물	1 (1동)	1,503	3,680,000	일반 회계	4	수산연구소 친환경 양식 특화연구센터 신축	취득	건물	1 (4동)	2,700	2,900,000	일반 회계	5	농업기술원 과채시험 연구보상용 토지 매입	취득	토지	1 (4필지)	9,283	223,844	일반 회계				
연번	의안명	구분	재 신 현 황					비 고																																																		
			종류	건수	면적 (㎡)																																																					
1	공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취득	건물	1 (1동)	1,436	3,400,000	일반 회계																																																			
2	서산의료원 재활센터 및 격리병동 신축	취득	건물	1 (1동)	7,175	17,500,000	일반 회계																																																			
3	홍성의료원 응급의료 센터 신축	취득	건물	1 (1동)	1,503	3,680,000	일반 회계																																																			
4	수산연구소 친환경 양식 특화연구센터 신축	취득	건물	1 (4동)	2,700	2,900,000	일반 회계																																																			
5	농업기술원 과채시험 연구보상용 토지 매입	취득	토지	1 (4필지)	9,283	223,844	일반 회계																																																			
동의안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 됨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																																																						
동의안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금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 고</th></tr><tr><td></td><td>계</td><td></td><td>7건</td><td>15,712,500</td><td></td></tr><tr><td>1</td><td>정 책 기 획 관</td><td>충남연구원</td><td>충남연구원 운영 지원</td><td>5,570,000</td><td></td></tr><tr><td>2</td><td>정 책 기 획 관</td><td>한국지방행정연구원</td><td>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td><td>150,000</td><td>17개 시도 공통</td></tr><tr><td>3</td><td>예 산 담 당 관</td><td>지방공기업평가원</td><td>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td><td>66,000</td><td></td></tr><tr><td>4</td><td>교육법무 담 당 관</td><td>(재)충남인재육성재단</td><td>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td><td>5,300,000</td><td></td></tr><tr><td>5</td><td>교육법무 담 당 관</td><td>(재)충남인재육성재단</td><td>인재육성재단 운영비</td><td>2,500,000</td><td></td></tr><tr><td>6</td><td>교육법무 담 당 관</td><td>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td><td>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td><td>2,055,000</td><td></td></tr><tr><td>7</td><td>지속가능 발전담당관</td><td>한국지역진흥재단</td><td>한국지역진흥 재단지원 출연</td><td>71,500</td><td>17개 시도 공통</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금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 고		계		7건	15,712,500		1	정 책 기 획 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5,570,000		2	정 책 기 획 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50,000	17개 시도 공통	3	예 산 담 당 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66,000		4	교육법무 담 당 관	(재)충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5,300,000		5	교육법무 담 당 관	(재)충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2,500,000		6	교육법무 담 당 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2,055,000		7	지속가능 발전담당관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 재단지원 출연	71,500	17개 시도 공통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금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 고																																																					
	계		7건	15,712,500																																																						
1	정 책 기 획 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5,570,000																																																						
2	정 책 기 획 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50,000	17개 시도 공통																																																					
3	예 산 담 당 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66,000																																																						
4	교육법무 담 당 관	(재)충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5,300,000																																																						
5	교육법무 담 당 관	(재)충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2,500,000																																																						
6	교육법무 담 당 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2,055,000																																																						
7	지속가능 발전담당관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 재단지원 출연	71,500	17개 시도 공통																																																					

안전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고</th></tr><tr><td></td><td>계</td><td></td><td>2건</td><td>323,076</td><td></td></tr><tr><td>1</td><td>도민협력 새마을과</td><td>충남연구원</td><td>둘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td><td>162,000</td><td></td></tr><tr><td>2</td><td>세무 회계과</td><td>지방세연구원</td><td>지방세연구원 출연</td><td>161,076</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2건	323,076		1	도민협력 새마을과	충남연구원	둘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162,000		2	세무 회계과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161,076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2건	323,076																																																																		
1	도민협력 새마을과	충남연구원	둘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162,000																																																																		
2	세무 회계과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161,076																																																																		
동의안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 관실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고</th></tr><tr><td></td><td>계</td><td></td><td>2건</td><td>2,394,400</td><td></td></tr><tr><td>1</td><td>여성가족 정책관실</td><td>여성정책 개발원</td><td>여성정책개발원 운영</td><td>1,684,400</td><td></td></tr><tr><td>2</td><td>여성가족 정책관실</td><td>(재)충청남도청 소년진흥원</td><td>(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 원 운영</td><td>71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2건	2,394,400		1	여성가족 정책관실	여성정책 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684,400		2	여성가족 정책관실	(재)충청남도청 소년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 원 운영	710,000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2건	2,394,400																																																																		
1	여성가족 정책관실	여성정책 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684,400																																																																		
2	여성가족 정책관실	(재)충청남도청 소년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 원 운영	710,000																																																																		
동의안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고</th></tr><tr><td></td><td>계</td><td></td><td>9건</td><td>7,381,000</td><td></td></tr><tr><td>1</td><td>문화정책과</td><td>충남역사 문화 연구원</td><td>운영출연금</td><td>1,727,200</td><td></td></tr><tr><td>2</td><td>문화정책과</td><td>(재)충남 문화재단</td><td>유형 출연금</td><td>1,847,700</td><td></td></tr><tr><td>3</td><td>문화정책과</td><td>충남문화 산업진흥원</td><td>운영출연금</td><td>2,221,500</td><td></td></tr><tr><td>4</td><td>문화재단</td><td>충남역사 문화 연구원</td><td>옛 도지사실 운영</td><td>59,600</td><td></td></tr><tr><td>5</td><td>문화재단</td><td>충남역사 문화 연구원</td><td>기호유교 인문학프로그램</td><td>45,000</td><td></td></tr><tr><td>6</td><td>문화재단</td><td>백제유적통합관 리사업단</td><td>백제유적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td><td>400,000</td><td></td></tr><tr><td>7</td><td>관광산업과</td><td>충남문화원 연합회</td><td>명사와 함께하는 나로투어</td><td>45,000</td><td></td></tr><tr><td>8</td><td>관광산업과</td><td>(재)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td><td>제62회 백제문화제</td><td>1,000,000</td><td></td></tr><tr><td>9</td><td>관광산업과</td><td>충남역사 문화연구원</td><td>삼국문화교류 국제학술회의</td><td>45,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9건	7,381,000		1	문화정책과	충남역사 문화 연구원	운영출연금	1,727,200		2	문화정책과	(재)충남 문화재단	유형 출연금	1,847,700		3	문화정책과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운영출연금	2,221,500		4	문화재단	충남역사 문화 연구원	옛 도지사실 운영	59,600		5	문화재단	충남역사 문화 연구원	기호유교 인문학프로그램	45,000		6	문화재단	백제유적통합관 리사업단	백제유적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000		7	관광산업과	충남문화원 연합회	명사와 함께하는 나로투어	45,000		8	관광산업과	(재)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제62회 백제문화제	1,000,000		9	관광산업과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삼국문화교류 국제학술회의	45,000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9건	7,381,000																																																																		
1	문화정책과	충남역사 문화 연구원	운영출연금	1,727,200																																																																		
2	문화정책과	(재)충남 문화재단	유형 출연금	1,847,700																																																																		
3	문화정책과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운영출연금	2,221,500																																																																		
4	문화재단	충남역사 문화 연구원	옛 도지사실 운영	59,600																																																																		
5	문화재단	충남역사 문화 연구원	기호유교 인문학프로그램	45,000																																																																		
6	문화재단	백제유적통합관 리사업단	백제유적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000																																																																		
7	관광산업과	충남문화원 연합회	명사와 함께하는 나로투어	45,000																																																																		
8	관광산업과	(재)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제62회 백제문화제	1,000,000																																																																		
9	관광산업과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삼국문화교류 국제학술회의	45,000																																																																		
동의안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고</th></tr><tr><td></td><td>계</td><td></td><td>5건</td><td>2,914,000</td><td></td></tr><tr><td>1</td><td>식품의약과</td><td>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td><td>의료원 경영안정지원</td><td>850,000</td><td></td></tr><tr><td>2</td><td>식품의약과</td><td>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td><td>의료원 용자금 원금상 환 지원</td><td>863,000</td><td></td></tr><tr><td>3</td><td>식품의약과</td><td>2개 의료원 (천안·공주)</td><td>유동성 인·출·의료원 용 자금 이차지원</td><td>661,000</td><td></td></tr><tr><td>4</td><td>식품의약과</td><td>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td><td>의료원 공공보건사업</td><td>180,000</td><td></td></tr><tr><td>5</td><td>식품의약과</td><td>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td><td>취약계층 (무료사술)의 료지원사업</td><td>36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5건	2,914,000		1	식품의약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	의료원 경영안정지원	850,000		2	식품의약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	의료원 용자금 원금상 환 지원	863,000		3	식품의약과	2개 의료원 (천안·공주)	유동성 인·출·의료원 용 자금 이차지원	661,000		4	식품의약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180,000		5	식품의약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	취약계층 (무료사술)의 료지원사업	360,000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5건	2,914,000																																																																		
1	식품의약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	의료원 경영안정지원	850,000																																																																		
2	식품의약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	의료원 용자금 원금상 환 지원	863,000																																																																		
3	식품의약과	2개 의료원 (천안·공주)	유동성 인·출·의료원 용 자금 이차지원	661,000																																																																		
4	식품의약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180,000																																																																		
5	식품의약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 서산·홍성)	취약계층 (무료사술)의 료지원사업	360,000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 고</th></tr><tr><td></td><td>계</td><td></td><td>41건</td><td>23,807,000</td><td></td></tr><tr><td>1</td><td>경제정책과</td><td>충남연구원</td><td>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td><td>400,000</td><td></td></tr><tr><td>2</td><td>경제정책과</td><td>충남테크노파크</td><td>청년사관학교 운영</td><td>150,000</td><td></td></tr><tr><td>3</td><td>투자인자과</td><td>충남경제진흥원</td><td>기업유치실명회</td><td>45,000</td><td></td></tr><tr><td>4</td><td>기업특성 크류과</td><td>충남인재 육성재단</td><td>민간국제크류 협력지원</td><td>90,000</td><td></td></tr><tr><td>5</td><td>기업특성 크류과</td><td>충남경제진흥원</td><td>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외 11건</td><td>2,451,500</td><td></td></tr><tr><td>6</td><td>기업특성 크류과</td><td>충남신용 보증재단</td><td>햇살론 보증지원 출연금</td><td>2,980,000</td><td></td></tr><tr><td>7</td><td>지역산업과</td><td>충남테크노파크</td><td>지역혁신거점사업 외 22건</td><td>23,490,500</td><td></td></tr><tr><td>8</td><td>에너지산업과</td><td>충남테크노파크</td><td>화력발전사 연계 지역 산업 육성</td><td>20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 고		계		41건	23,807,000		1	경제정책과	충남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400,000		2	경제정책과	충남테크노파크	청년사관학교 운영	150,000		3	투자인자과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유치실명회	45,000		4	기업특성 크류과	충남인재 육성재단	민간국제크류 협력지원	90,000		5	기업특성 크류과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외 11건	2,451,500		6	기업특성 크류과	충남신용 보증재단	햇살론 보증지원 출연금	2,980,000		7	지역산업과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 외 22건	23,490,500		8	에너지산업과	충남테크노파크	화력발전사 연계 지역 산업 육성	200,000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 고																																																																	
	계		41건	23,807,000																																																																		
1	경제정책과	충남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400,000																																																																		
2	경제정책과	충남테크노파크	청년사관학교 운영	150,000																																																																		
3	투자인자과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유치실명회	45,000																																																																		
4	기업특성 크류과	충남인재 육성재단	민간국제크류 협력지원	90,000																																																																		
5	기업특성 크류과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외 11건	2,451,500																																																																		
6	기업특성 크류과	충남신용 보증재단	햇살론 보증지원 출연금	2,980,000																																																																		
7	지역산업과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 외 22건	23,490,500																																																																		
8	에너지산업과	충남테크노파크	화력발전사 연계 지역 산업 육성	200,000																																																																		
동의안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 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 고</th></tr><tr><td></td><td>계</td><td></td><td>9건</td><td>2,489,000</td><td></td></tr><tr><td>1</td><td>농 업 정책과</td><td>충남연구원</td><td>충남 농업인 6차 산업학선다 운영</td><td>269,000</td><td></td></tr><tr><td>2</td><td>농 업 정책과</td><td>충남연구원</td><td>6차산업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td><td>878,000</td><td></td></tr><tr><td>3</td><td>농 민 정책과</td><td>충남연구원</td><td>시설디렉토리 구축</td><td>50,000</td><td></td></tr><tr><td>4</td><td>농 업 정책과</td><td>충남연구원</td><td>농식품 제품 디자인 사업</td><td>27,000</td><td></td></tr><tr><td>5</td><td>농 업 정책과</td><td>충남연구원</td><td>충남6차산업 홈페이지 관리</td><td>38,000</td><td></td></tr><tr><td>6</td><td>농산물 유통과</td><td>(재)충남경제진흥원</td><td>인도네시아 농산물 운영</td><td>500,000</td><td></td></tr><tr><td>7</td><td>친환경 농산과</td><td>(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td><td>위관회 운영비 출연</td><td>360,000</td><td></td></tr><tr><td>8</td><td>친환경 농산과</td><td>(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td><td>세계인삼도시 연맹 출범</td><td>63,000</td><td></td></tr><tr><td>9</td><td>농촌마을 지원과</td><td>충남연구원</td><td>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센터 운영</td><td>308,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 고		계		9건	2,489,000		1	농 업 정책과	충남연구원	충남 농업인 6차 산업학선다 운영	269,000		2	농 업 정책과	충남연구원	6차산업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878,000		3	농 민 정책과	충남연구원	시설디렉토리 구축	50,000		4	농 업 정책과	충남연구원	농식품 제품 디자인 사업	27,000		5	농 업 정책과	충남연구원	충남6차산업 홈페이지 관리	38,000		6	농산물 유통과	(재)충남경제진흥원	인도네시아 농산물 운영	500,000		7	친환경 농산과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위관회 운영비 출연	360,000		8	친환경 농산과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세계인삼도시 연맹 출범	63,000		9	농촌마을 지원과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센터 운영	308,000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 고																																																																	
	계		9건	2,489,000																																																																		
1	농 업 정책과	충남연구원	충남 농업인 6차 산업학선다 운영	269,000																																																																		
2	농 업 정책과	충남연구원	6차산업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878,000																																																																		
3	농 민 정책과	충남연구원	시설디렉토리 구축	50,000																																																																		
4	농 업 정책과	충남연구원	농식품 제품 디자인 사업	27,000																																																																		
5	농 업 정책과	충남연구원	충남6차산업 홈페이지 관리	38,000																																																																		
6	농산물 유통과	(재)충남경제진흥원	인도네시아 농산물 운영	500,000																																																																		
7	친환경 농산과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위관회 운영비 출연	360,000																																																																		
8	친환경 농산과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세계인삼도시 연맹 출범	63,000																																																																		
9	농촌마을 지원과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센터 운영	308,000																																																																		
동의안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 고</th></tr><tr><td></td><td>계</td><td></td><td>3건</td><td>644,000</td><td></td></tr><tr><td>1</td><td>환경 정책과</td><td>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연구대응센터)</td><td>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td><td>345,000</td><td></td></tr><tr><td>2</td><td>물관리 정책과</td><td>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관경 연구센터)</td><td>물동량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td><td>49,000</td><td></td></tr><tr><td>3</td><td>물관리 정책과</td><td>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관경 연구센터)</td><td>물관경연구센터 지원</td><td>25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 고		계		3건	644,000		1	환경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연구대응센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345,000		2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관경 연구센터)	물동량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49,000		3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관경 연구센터)	물관경연구센터 지원	250,000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 고																																																																	
	계		3건	644,000																																																																		
1	환경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연구대응센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345,000																																																																		
2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관경 연구센터)	물동량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49,000																																																																		
3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관경 연구센터)	물관경연구센터 지원	250,000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고</th></tr><tr><td></td><td>계</td><td></td><td>2건</td><td>2,100,000</td><td></td></tr><tr><td>1</td><td>건축 도시과</td><td>충남 공공디자인센터</td><td>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td><td>450,000</td><td></td></tr><tr><td>2</td><td>도로 교통과</td><td>충청남도 교통연수원</td><td>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사업</td><td>1,65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2건	2,100,000		1	건축 도시과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	450,000		2	도로 교통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사업	1,650,000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계		2건	2,100,000																																															
1	건축 도시과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	450,000																																															
2	도로 교통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사업	1,650,000																																															
동의안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자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자출연금액 (천원)</th><th>비고</th></tr><tr><td></td><td>해양 정책과</td><td>충남TP</td><td>해양바이오 프로젝트 사업</td><td>9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해양 정책과	충남TP	해양바이오 프로젝트 사업	90,000																																				
연번	소관실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출자출연금액 (천원)	비고																																														
	해양 정책과	충남TP	해양바이오 프로젝트 사업	90,000																																															
동의안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2017학년도부터 (가칭)천안불무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천안시)의 학교군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동의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천방법 개정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면지역 중학교의 적정규모화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동·읍지역 초·중학생이 희망할 경우 면지역 중학교에 입학, 전·편입학할 수 있도록 학교군·중학구를 변경하고 기타 신설 및 폐지 학교를 조정하려는 것임.																																															
동의안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도내 주력산업 성장둔화 추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 신뢰성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김연 의원 (오배근, 유찬중, 윤석우, 김원태, 김종필, 이공휘, 정정희 의원)	원안가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철회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고수 촉구																																															
기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지사	수정가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15. 11. 6. ~ 11. 19.(14일간) - 처분요구 현황 <table><tr><th>연번</th><th>구분</th><th>시정요구</th><th>처리요구</th><th>처리안</th></tr><tr><td></td><td>계</td><td>424건</td><td>47</td><td>226</td><td>151</td></tr><tr><td></td><td>의회운영위원회</td><td>13</td><td>8</td><td>-</td><td>7</td></tr><tr><td></td><td>행정자치위원회</td><td>68</td><td>8</td><td>34</td><td>26</td></tr><tr><td></td><td>문화복지위원회</td><td>99</td><td>5</td><td>79</td><td>15</td></tr><tr><td></td><td>농업경제환경위원회</td><td>118</td><td>16</td><td>57</td><td>45</td></tr><tr><td></td><td>안전건설해양수산위원회</td><td>62</td><td>11</td><td>29</td><td>22</td></tr><tr><td></td><td>교육위원회</td><td>66</td><td>3</td><td>27</td><td>36</td></tr></table>	연번	구분	시정요구	처리요구	처리안		계	424건	47	226	151		의회운영위원회	13	8	-	7		행정자치위원회	68	8	34	26		문화복지위원회	99	5	79	15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18	16	57	45		안전건설해양수산위원회	62	11	29	22		교육위원회	66	3	27	36
연번	구분	시정요구	처리요구	처리안																																															
	계	424건	47	226	151																																														
	의회운영위원회	13	8	-	7																																														
	행정자치위원회	68	8	34	26																																														
	문화복지위원회	99	5	79	15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18	16	57	45																																														
	안전건설해양수산위원회	62	11	29	22																																														
	교육위원회	66	3	27	36																																														

연구모임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9.23)

도내 사업장 폐기물 등 공공갈등 사례 분석 나서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지상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사산·청양·부여·예산·서천·금산군 민간 사업폐기물 매립장 입지 현황과 갈등 원인 등을 공유했다. 또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타 지역 갈등 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 상

생 대안을 제시했다. 윤지상 의원은 "도내 사업장 폐기물 입지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 분석이 필요했다"며 "사업자와 지역민 간 갈등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타 지역 선진 사례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포화로 인근 충청 지역에 집중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이 충남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민의 정주조건 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갈등을 넘어 지역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모임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지난 4월 발족해 7월 부여군 은산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10.29~30)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위한
타사·도 정책 사례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10월 29~30일 양일간 타 시·도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전낙운 대표를 비롯해 연구모임 임원들은 이날 강원도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및 충북 제천 월악산 무장애 탐방로, 댛돈재 야영장 등을 둘러봤다. 이처럼 연구모임이 앞장서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하고 나선 것은 도내 대둔산과 칠갑산 등 도립공원 관광객 유치에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기 위해서다.

친환경과 경제 등 일거양득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현장 활동을 통한 생생한 목소리 청취가 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임원들은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경위와 민자 유치 성공사례, 관리 운영 계획 및 지역민 참여율 제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 주변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충북 제천 월악산 국립공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야영장 경제성 분석과 캠핑트렌드 변화 등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전낙운 의원은 "도립공원의 지속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현명한 이용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남에 접목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집약해 이달 중으로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하천의 친수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10.30)

양방향 소통 통한 하천 개발 촉구

충남도의회 하천의 친수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은 10월 30일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하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같은 날 의정토론회를 연 직후 더욱 구체적인 하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천이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변모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응규 의원은 “도내 도심구간을 관류하는 하천의 친수공간은 하천정비사업 시행 시 설치된 공간으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친수공간이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천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 연구모임(11.5)

관광산업 미래전략 마련 모색

충남도의회 관광산업연구모임은 지난 11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관광산업의 미래전략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충남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유찬중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에서 최인호 청운대 교수가 관광환경 변화와 충남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충남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경유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경유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유 대표의 조언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모임 임원들은 충남만의 특화상품 개발 및 성과보수 제도 마련이 시

급하고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발제 자료를 인용해 “특화상품 개발 및 브랜드 파워 강화가 시급하다”며 “트렌드리딩형 관광수용태세 구축과 지역 관광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험과 감성, 스토리텔링을 종합한 관광이 확산돼야 한다”며 “문화와 이미지, 상상을 조합한 관광이 앞으로 먹을거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11.25)

학교 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 정책 제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11월 25일 2차 정기모임을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최종 점검했다.

앞서 이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첫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워크숍(6월), 일선 학교 현장 점검(8월)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문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간 집약한 내용을 종합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이동·청소년 학습부진(난독증) 개선사업 ▲교권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유아교육 발전 ▲인성교육 등 4가지 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홍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충남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11.26)

갈등 해결사 역할 톡톡... 사회·시간적 손해 발생 사례 수집 등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11월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지난 8개월간의 활동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윤자상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그동안 도내 공공갈등으로 사회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수집·분석했다.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을 비롯한 청양군 석면 폐기물, 부여 은산면 폐기물 사업장 등이 공공갈등이 야기되는 곳으로 지목됐다.

연구모임은 이 지역을 일일이 누비며 지역민과 사업자 간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했다

는 평가다.

윤 대표는 “도와 일선 시·군 등에 정책을 제언해 공공갈등 실마리를 풀겠다는 게 연구모임 존재 이유였다”며 “공공갈등 현안 중 도내 6곳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폐기물 입지 갈등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지역민과 관계 기관의 호응을 이끌었다”며 “향후 도와 전문가, 도의회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실태조사 및 분류를 통한 갈등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확인을 통한 갈등 전개상황을 분석하는 등 원칙과 확립을 도모했다”며 “갈등관리 현장 지원을 통해 실천적 갈등 관리를 구현했다”고 평했다.

의 정 토 론 회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학부모의 역할 의정토론회(9.16)

자유학기제 성공 정착 위한 사전 처방 나서

충남도의회는 9월 16일 도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학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맹정호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 사전 처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맹 의원이 앞장서 의정토론회를 연 이유는 여전히 지역사회와 일선 학교 현장에선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두 마리 토끼’(학업과 끼)를 모두 잡을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맹정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자유학기제 도입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며 “성공 추진을 위해선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관광객 유치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10.28)

맞춤형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아산시 배방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남 관광객 유치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각계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관광객 유치전에 뛰어든 이유는 관광객 증가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지역의 경우 관광으로 인한 뚜렷한 먹거리 창출 비전이 부재한 데다, 문화산업에 대한 전략마저도 길음마 수준이라

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날 당면한 관광객 유치 문제와 관광 마케팅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단순히 일회성 축제나 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아닌, 침체한 지역 경기를 회복할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산업화를 꾸려야 한다는 데 방침을 짰었다.

윤지상 의원은 “지역별 전략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도는 이에 대한 뚜렷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산업 분야는 지난 10년간 매출 2배, 수출 8배가 증가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문화산업과 관광사업과의 융합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관광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전략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천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10.29)

하천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월 29일 아산시 청소년교육 문화센터 소강당에서 '하천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응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하천 내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하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하천은 1990년 치수 위주의 토목하천에서 최근 친환경 다기능 복합하천으로 변모했다"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친수 공간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렇게 변화하면서 자연과 경제 논리 등 주요 쟁점이 맞서고 있다"며 "하천의 고유성과 역동성은 지키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합할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은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임은 분명하다"며 "지역 고유의 색을 살린 하천 복원을 통해 체육과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곡교천을 예로 들면 하류인 삼교호와 와천 구역은 부지 고유의 지형과 동식물을 발굴, 사계절 자연 생태계 담방을 유도하는 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 및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관광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하천에 대한 관리 방안과 제도적·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안전한 충남 건설 위한 의정토론회(11.24)

16층 이상 공동주택 최근 5년 48% 증가, 재난 경고

충남도의회는 11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안전 충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토론회는 충남의 안전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향후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도내 16층 이상 공동주택이 최근 5년 사이 48% 이상 늘어나면서 고층 건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화재 진압 장비가 건물의 고층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헬기 역시 건물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총 1118동이다. 이는 2010년 754동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48% 늘어난 수치다. 반면 도로확장, 아파트 건립, 건물 증가, 각종 포장 등으로 배수 및 투수면적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화 의원은 "충남은 해안인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된 데다, 농기계 전복사고, 자살률 등이 전

국 상위권"이라며 "이들 사고는 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팽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며 "도와 의회 그리고 민간이 모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영 의장은 "이번 의정토론회를 통해 주변 재난 위험요소 안전조치와 안전교육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도의회는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11.25)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확산 분위기 조성

충남도의회는 11월 25일 천안교육청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인성 교육 또는 법상머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최근 학교 폭력을 비롯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홍성현 의원은 기초발제를 통해 “사회가 불안정하고 교육 정책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많은 사람이 인성 교육 운운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과 왕따, 자살, 군대 총기 사고 등 이들 대상자 대부분이 인성 검사 결과에서 관심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은 더는 인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며 “일반인,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2.4%가 초·중·고교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이 낮다고 인식했고 이 중 48%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인성교육 또는 전인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홍 의원은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 과제를 개발, 추진해야 한다”며 “가정에서의 법상머리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01 9월30일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유익환 부의장, 조길행 운영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김복만 의원, 신재원 의원, 서형달 의원 등은 보령만을 찾아 가뭄 현장을 점검했다.

02 10월2일 조길행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제24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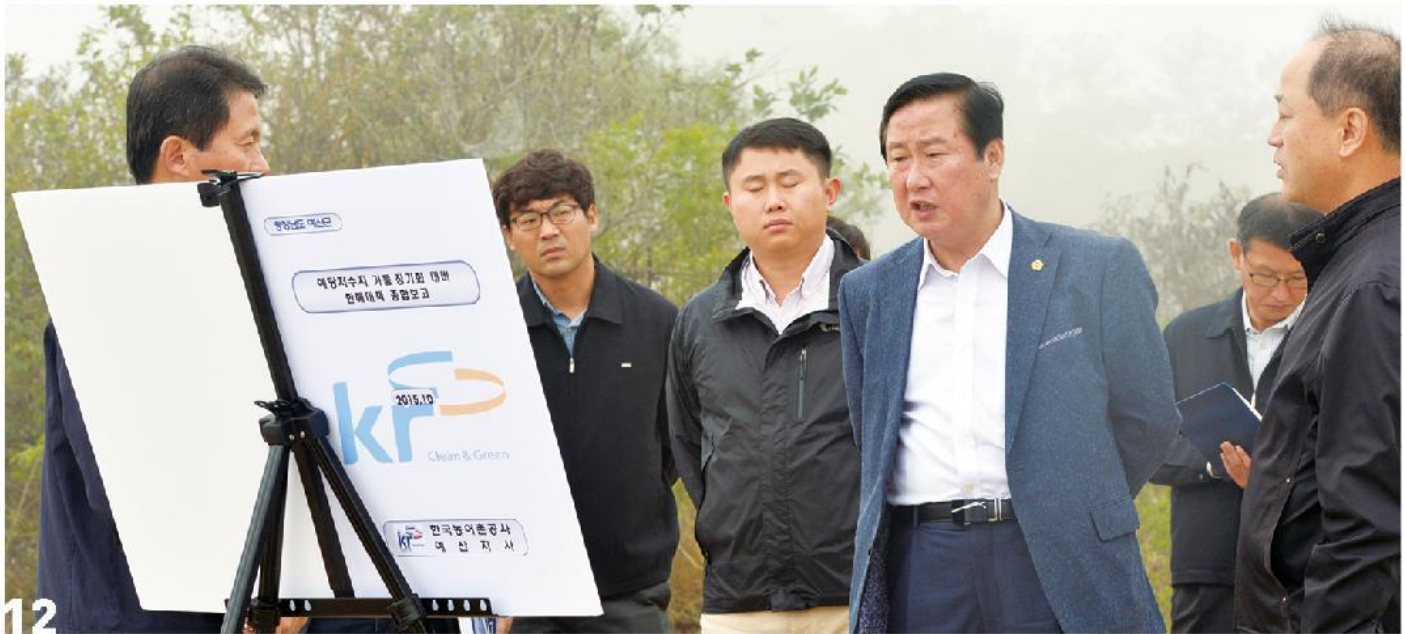
03 10월5일 김기영 의장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월남전참전자회 충남도지부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04 10월5일 조길행 운영위원장의 안내로 공주시 무성면 방흥리 주민일행 40여명이 도의회를 방문해 홍보관,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물을 둘러봤다.
- 05 10월6일 김기영 의장, 유익환 부의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은 도의회 홍보관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 작품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작품을 감상했다.
- 06 10월7일 김기영 의장은 도민 인권선언 선포(14.10.13) 1주년을 기념해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단위 유관기관간 인권증진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 07 10월7일** 김기영 의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방문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접견하고 국민적 '올림픽 붐업' 조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08 10월8일** 김연 의원, 이공휘 의원, 정정희 의원, 조치연 의원, 윤석우 의원, 송덕빈 의원, 김종문 의원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충남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했다.
- 09 10월9일** 김기영 의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김원태 의원은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회 어울림 가족축제에 참석했다.



- 10 10월13일 송덕빈 의원, 유병국 의원, 정정희 의원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 11 10월15일 조길행 운영위원장의 안내로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주민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회의실, 홍보관 등을 둘러봤다.
- 12 10월20일 충남 서부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김기영 의장은 예당저수지를 찾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에게 현황 보고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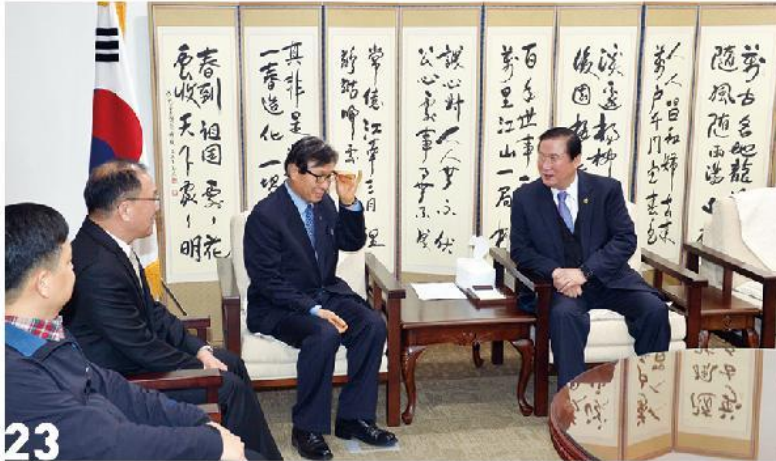
- 13 10월21일 김기영 의장은 예산군 예당저수지 기슭 피해 현장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 14 10월22일 김기영 의장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2회 어르신 대축제에 참석해 노인복지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15 10월27일 송덕빈 의원의 안내로 논산시 상월면 주민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회의실, 홍보관 등을 둘러봤다.



- 16 10월28일 유익환 부의장은 강원도 강릉시 강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충남 선수단을 격려했다.
- 17 10월30일 김석곤 의원은 금산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18 11월03일 유익환 부의장은 예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5 임업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19 11월06일 김기영 의장은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세계평화공존사상 계승 동북아평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 20 11월09일 김기영 의장, 유익환 부의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 알다로프쿠즈마 로마노비치 부의장과 비나르스키 유리 블라디슬라보비치 고문을 만나 우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 21 11월12일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0주년 기념 2015년도 대전 세종 충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했다.
- 22 11월16일 김기영 의장과 유익환 부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오상명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일행을 접견했다.



23 11월18일 김기영 의장은 도의회 집견실에서 내포그린에너지(주) 조성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집견했다.

24 11월20일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은 충남도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내포 김장김치 한마당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5 11월23일 김기영 의장, 유익환 부의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김동욱 의원, 맹정호 의원, 윤지상 의원은 의회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충남도청에 마련된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였다.



26



28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2015년 제8차 임시회

2015. 12. 3(목) 호텔리베라유성



27

26 11월24일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과 유병국 의원은 세종·충남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2015 풀뿌리자치언론대상충청인상' 시상식에서 도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7 12월03일 김기영 의장은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5년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8 12월08일 윤석우 의원의 안내로 공주시 계룡면 주민일행이 도의회를 방문해 홍보관,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물을 둘러봤다.



- 29 12월10일 김기영 의장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 충남 수출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 30 12월16일 충남도의회는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간 활발한 입법 활동과 선진 의정 실현,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등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앞장섰다고 자평했다.
- 31 12월17일 유병국 의원, 맹정호 의원은 201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공주의 이야기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 모임 '바탕W회'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 뽐내



충남도의회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도의회 1층 홍보관에서 '공주의 이야기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여성화가 모임인 '바탕W회'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도민들에게 뽐내기 위해 마련하였고 서양화 등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도의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과 함께 충남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공감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향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발판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의장은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역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교감해야 문화예술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지역 여성의 정성이 담긴 미술품을 전시함으로써 도민 관심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정 회장은 "학교 졸업 후 주부나 직장생활로 인해 소홀했던 창작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둔 여성작가들이 모여 만든 작품"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기반으로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계획

○ 회기 : 9회 125일 (정례회 2회 57일, 임시회 7회 68일) ※예비일수 : 15일

※ 연간회의 가능 일수 : 140일(정례회 60, 임시회 80)

회 기 별	기 간	주 요 안 건	비 고
제284회 임시회	1. 25(월) ~ 2. 4(목) (11일간)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85회 임시회	3. 15(화) ~ 3. 25(금) (11일간)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결산검사 (4. 15 ~ 5. 4) : 20일 예정 ※ 동북아 지방의회 포럼 (4.18~4.20)			
제286회 임시회	5. 10(화) ~ 5. 19(목) (10일간)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87회 정례회	6. 1(수) ~ 6. 17(금) (17일간)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88회 임시회	6. 30(목) ~ 7. 4(월) (5일간)	- 제10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거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89회 임시회	7. 12(화) ~ 7. 21(목) (10일간)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90회 임시회	8. 30(화) ~ 9. 9(금) (11일간)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2016 행정사무감사계획 기간 결정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91회 임시회	9. 26(월) ~ 10. 5(수) (10일간)	2016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92회 정례회	11. 7(월) ~ 12. 16(금) (40일간)	2016 행정사무감사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2017 본예산, 2016 추경 예산안 처리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특위 운영 : 회기별 1~2일간 신축 운영



지금 그리고 여기

2016
1~2월



태안 빛축제

2016.01.01 ~ 2016.12.31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마검포길 200

충남지역 최초 화려한 조명으로 '바다내음 한아름 빛으로 피어나는 추억'이란 주제로 테마가 있는 25개의 포토존들이 꾸며져 있다. 600만 구의 LED 전구를 이용해 축제장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다.

네이처 영농조합법인 041-675-9200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2015.12.24 ~ 2016.02.14. / 충남 청양군 알프스마을 일원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군것질거리, 잠잘거리, 주변구경거리의 7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장 곳곳에 전시된 얼음분수와 눈 조각, 얼음조각들이 겨울축제만의 볼거리를 제공하며, 각양각색의 코스로 구성된 눈썰매와 얼음썰매, 얼음봅슬레이 등이 즐거움을 더한다.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 041-942-0797~8



공주 장승마을 빛축제

2015. 2. 7~2016. 2. 7.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유구마곡사로 1231

축제는 '자연+빛+아름다움'을 모토로 수천개의 LED조명과 조형물, 경관 조명 등 볼거리가 그 어떤 빛 축제보다 풍성하다. 이밖에도 축제의 볼거리와 더불어 군고구마, 군밤 구워먹기 체험, 봉어빵 만들어 먹기 등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즐길거리와 먹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장승마을 041-841-5220~1



모바일세상 속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
(council.chungnam.go.kr)입력
- ②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검색 후 앱 설치
- ③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 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 ④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의회 방청 안내

| 방청문의 |

총무담당관실 ☎ 041-635-5054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팩스
(☎ 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시 유의사항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 <http://blog.naver.com/cncouncil>
- 📘 <https://www.facebook.com/cncouncilNP>
- 🐦 <https://mobile.twitter.com/council>
- 📌 카카오톡에서 **Cnc12** 검색후 소식받기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이메일 jungsnk@korea.kr

전 화 041-635-5102 팩 스 041-635-5009

우 편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